

2004년도

정 책 조 정 백 서

□ 2004.1 ~ 2004.12 □

국 무 조 정 실

< 목 차 >

I . 2004년도 조정현황 총괄	1
II . 2004년도 조정실적	7
1. 완료과제 (62건)	7
2. 조정을 진행중인 과제 (4건)	101
□ 참고자료	107
1.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총리훈령)	108
2. 부총리·책임장관회의 운영	116
3. 주무부처 간사회의 운영	119
4.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123

I . 2004년도 조정현황 총괄

1. 정책조정시스템

(1) 조정규정 : 정부업무조정등에 관한 규정 (총리훈령, '03.10.31 제정)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 ◇ 부처간 이견사항 등에 대한 정책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절차 및 시스템을 제도화('03.10.31)
- ◇ 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①조정이전 단계 ②조정단계 ③조정이후 사후관리 단계로 나누어 관리
 - * 조정이전단계 : 사전협의 의무화, 공개시 협의가 필요한 시안임을 밝혀 공개
 - * 조정단계 : 당사자조정→5대 정책분야별 조정→총리실 조정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총리실에서 직접 조정
 - * 조정이후단계 : 합의결과 이행실태 확인·평가
- ◇ 조정과제 등록, 조정신청, 조정시한 설정, 추진상황 점검체제 확립
 - * '04.9.20 훈령을 개정하여 정책분야별 조정을 4대 분야 → 5대분야로 개편

□ 정책조정절차

○ 당사자 협의·조정

- 정책주관부처는 의견수렴과정에서 이견발생시 관계부처와 당사자간 협의·조정 추진

○ 5대 분야별 책임부처 조정

- 당사자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분야별 주무부처의 주관으로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조정
 - ▲ 경제분야 : 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
 - ▲ 인적자원개발분야 : 교육부 (인적자원개발회의)
 - ▲ 과학기술혁신분야 : 과기부(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 통일외교안보분야 :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
 - ▲ 사회문화분야 : 복지부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 국무총리실 조정

- 5대분야별 주무부처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국무총리실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

(2) 주요 정책조정 회의체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시스템을 도입 ('03.5)하여 매주 1회 운영 ('04년까지 총 95회 개최)

* LG칼텍스정유 등 노동계 현안 대처, 한·칠레 FTA 추진대책,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문제, 노인복지정책, 장애인체육발전방안, 담배값 인상 방침 확정,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 쌀협상 대책, 조류인플루엔자, 북한용천 재해 복구지원, 혈액안전관리대책 등

□ 부총리·책임장관회의

- 5대 분야별 부총리와 책임장관들이 참석하여 주요 국정운영방향 점검 및 정책현안 조정 ('04.8.30일 1차회의, '04년말 현재 3회)

□ 정책조정 관리체계 : 5대 분야 주무간사회의 (매월 1회 개최)

- 국무조정실 및 5대분야 주무부처의 조정활동 실적 및 향후 조정계획을 점검·독려

* 청와대,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통일부, 복지부 참여

□ 평가 및 향후 과제 □

- '03.10월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제정 이후 정책조정 절차 및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 조정건수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이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 총62건중 국무조정실 40건, 재경부 17건, 보건복지부 3건, 교육·통일부 각 1건 조정
 - 향후 5대분야별 책임부처에 의한 조정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3. 2004년도 정책조정과제 현황

2004.12.31 현재

구분	완료 등	조정중	계
국무조정실	40	2	42
재정경제부	17	2	19
교육인적자원부	1	-	1
과학기술부	-	-	-
통일부	1	-	1
보건복지부	3	-	3
계	62	4	66

4. 조정과제 목록

(1) 조정을 추진중인 과제(4건)

연번	과제명	조정부처	주관부처	관계부처
1	식용견 위생처리 관련	국조실	복지부	농림부
2	자활사업 참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국조실	복지부	노동부
3	부산신항 항만명칭 변경	해수부	해수부	관련 지자체
4	스크린쿼터 축소	재경부	문화부	재경부, 외교부

(2) 완료과제(62건)

연번	과제명	조정기관	주관부처	관계부처/집단	조정결과
1	상장주식선물의 부산선물거래소 이관	재경부	재경부	증권·선물거래소 등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2004년말까지 설립(본사는 부산에 설치)
2	현역사병등 건강보험 적용 관련	국조실	복지부	국방부 등	병역의무자 약국·외래·입원까지 건강보험 적용
3	우체국 금융개편	당사자	정통부	재경부 등	우체국금융개편 TF를 통하여 개선방안 마련
4	인천 제2연륙교 건설 관련(2)	재경부	건교부	재경부 인천시	낙찰자 선정 등 일정 합의 및 공사접근로 비용 인천시 부담 합의
5	쓰레기 소각장 건설 관련	당사자	환경부	각 지자체	소각장 건설업무는 지자체 고유사무이므로 관리과제에서 제외
6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합리화	재경부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삼성 기흥공장, 쌍용 평택공장 증설 허용 외투기업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1년연장

연번	과 제 명	조정 기관	주관 부처	관계부처/집단	조정 결과
7	자격기본법 개정	국조실	교육부	노동부	국가직무능력 표준용어는 '직무'를 기준으로 개발, 자격체계 관련 조항 존치
8	FTA 이행특별법 제정	농림부	농림부	농민단체 등	농민단체 등 의견을 반영, 법 제정
9	NEIS 시행 관련	국조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NEIS 중 교무, 학사 등 3개영역 DB를 분리하여 16개 시·도 단위로 운영
10	폭설피해복구 대책 관련 이견 조정	국조실	농림부 행자부	예산처	자동화하우수 복구지원단가 13.2% 보조금 대신 융자지원
11	위치정보이용및보호법 관련 이견	재경부	정통부	산자부	위치정보보호 관련 시책마련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12	의왕ICD기지 확장	국조실	건교부	행자부 의왕시	의왕ICD확장은 추진하지 않되, 장기적으로 수도권남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추진
13	수도권 그린벨트내 임대주택건설	국조실	건교부	환경부	주민, 지자체 의견수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환경부가 환경성검토기로 합의
14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개선	국조실	산자부	과기부	산자부, 과기부 공고를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공고"로 제정, 고시
15	골재수급 안정대책	국조실	건교부	환경, 해수, 웅진군 등	해수욕장 피해복구 예산지원, 점사용료 인상, 공급원 다양화
16	새만금간척사업	국조실	농림부	해수, 전북 환경단체 등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결정 취소
17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	교육부	교육부	건교부	부담금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 부과대상자를 분양받는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
18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국조실	행자부	인사위, 감사원 등	행자부 '복무감사'를 '복무확인점검'으로 하고, 징계관련 조항 삭제
19	서해 이북어장 어선 조업통제 주관기관	국조실	해수부	국방부, 해경	현행대로 해군에서 관리하되, 적절한 시기에 관련 법률 제정 추진
20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통계조정	재경부	노동부 통계청	중기청	노동부, 중기청이 시기를 달리하여 조사 실시 통계청이 통계발표전 양기관 통계평가 실시
21	배전분할 관련	산자부	산자부	한전노조	배전분할 중단, 독립사업부제 도입
22	상표법 개정 관련	재경부	특허청	농림부, 해수부 등	특허청장이 지리적표시 대상품목의 단체표장 출원 심사시 농림·해수부 의견 수렴
23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	건교부	건교부	고양시	경의선 복선 구간을 지상화로 건설
24	자연경관보호구역 지정 삭제, 지자체 단위 소규모개발사업은 환경부지침으로 경관 고려	국조실	환경부	건교부	자연경관보호구역 지정 삭제, 지자체 단위 소규모개발사업은 환경부지침으로 경관 고려
25	한약재 품질인증제 도입 관련	국조실	복지부	농림부	한약재 재배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조정
26	국가 관련 보유 헬기 안전관리 사무 조정	국조실	건교부	경찰청	경찰헬기는 항공법 등록 면제, 산림·소방·국립공원 헬기는 항공법 등록
27	철도대학 운영방안 관련 이견 조정	국조실	건교부 예산처	철도청, 철도대학	'05.1/4분기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사립화 관련 정부방침 및 추진계획 확정
28	중고휴대폰 수거, 재활용 관련	국조실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수거, 재활용 법령해석 합의, 시범사업에 이통사 및 제조사 적극 참여
29	DMZ 세계유산 지정 추진	국조실	환경부	문화재청	DMZ 세계유산 또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향후 남북합의에 의해 추진방법 결정
30	고속철도·새마을호 경로할인제 (30%) 추진 관련	국조실	복지부	건교, 철도, 예산처 등	주중 30% 내외 할인
31	인천공항철도 추가역사 신설 관련	국조실	건교부 예산처	인천, 서울 고양시 등	청라, 용유역 신설, 영종·마곡·고양역은 지자체 부담, 상암역 신설 불가
32	이동통신 요금 인하 관련	재경부	정통부		기본료 월 1,000원 인하
33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기구 부처별 설립	국조실	산자부	환경부, 정통부 등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 설립운영은 부처 자율로 추진
34	온라인 게임 이중심의	국조실	문광부	정통부	온라인게임 심의기구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일원화

연번	과 제 명	조정 기관	주관 부처	관계부처 /집단	조정 결과
35	농어촌 펜션 제도개선 추진	국조실	농림부	복지부, 문광부 등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도입 등 관리기능 강화
36	장기가동원전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	국조실	산자부	과기부, 한수원 등	과기부는 법적제도화, 산자부는 공론화 추진
37	원자력의학원 동남권分院설립 관련	국조실	과기부 기예처	부산시, 기장군 등	연구개발센터, 방사선 진료센터는 국고 지원 병원건립은 원자력의학원, 지자체 부담
38	오염물질의해안배출관리에관한 법률 제정	국조실	해수부	환경부	법을 제정 불필요 입장 국회 전달
39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기간 단축	통일부	국방부	과기부 교육부 등	복무기간 4년→3년 단축
40	공무원 노조 허용	국조실	노동부	전공노 등	노조형태는 헌법기관,지자체를 최소단위로 설립,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행동권 제외
41	부산항 컨테이너세 존폐문제	해수부	해수부	부산시	2007년부터 컨테이너세 폐지
42	해안가 산재 FRP조선소 집단 이주 관련	해수부	해수부	여수시	조선소 집단 이주계획 철회
43	국립묘지 관리 개선방안 (국립현충원 관리권 포함)	국조실	국방부	보훈처	엄격한 조건하에 의사상자들을 안장대상에 포함, 국립묘지 관할은 혁신위에서 결정
44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당사자 조정	노동부	재경부 산자부 등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2년→3년), 파견대상 확대,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전환 등
45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 일원화	국조실	건교부	법무부 등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주택법으로 일원화
46	자연문화유산 등에 관한 국민 신탁법 제정	국조실	환경부	문광부 등	환경부가 주관하되, 환경부·문화재청 공동입법 으로 추진
47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국조실	환경부	교육부, 건교부 등	시내버스차고지내에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설치를 단계적으로 허용
48	한탄강댐 건설	국조실	건교부	지역주민, 환경부	기존 댐건설 백지화, 저류지 및 홍수조절용 댐 건설
49	주한미군 재배치	국조실	국방부	지역주민	용산기지이전협정(UA), LLP수정안, 평택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50	퇴직연금제도 도입	노동부	노동부	노사 재경,산자등	4인이하 사업장만 적용 확대,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 시행
51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	복지부	복지부	경영계 노동계	보험료율 2030년까지 15.9%로 인상, 급여율은 2008년 50%로 인하,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52	에너지기본법 관련 이견조정	재경부	산자부	환경부	국가에너지위원회 간사 : 산자부장관, 민간 1 석유, 가스를 우선적인 에너지공급원으로 명시
53	ITA법 제정 추진	국조실	정통부	행자부	정통부에서 ITA기본계획 수립하되 중앙행정 기관, 지자체 관련사항은 행자부와 공동추진
54	철도청 경영개선대책 추진	국조실	재경부 행자부	예산처	철도청에서 공사사옥건립시까지 대전청사 사용, 임대료와 철도청 청사지분간 상계처리
55	통신 방송융합 관련 협의·조정 기능 강화	국조실	방송위	정통·문광 ·산자부 등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의 구성 운영
56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법 제정 추진	국조실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의원입법으로 추진됨에 따라 종결 처리
57	판교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이견 조율	국조실	건교부	환경부	인구밀도를 85인/ha 수준에서 결정
5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변경 관련	재경부	환경부	재경부, 산자부 등	'05년 에너지세제 개편이후 협의키로 결정
59	인천공항 제2연륙교 주경간 폭 조정	재경부	해수부	인천시	주경간폭을 800m로 확정, 추가비용은 중앙 정부와 인천시 50%씩 부담
60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관련	국조실	산자부	주민,시민 단체	중저준위폐기물 우선처리 결정
6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국조실	환경부	건교부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규모를 '05년 500톤 이상으로 하되, 2년후 100톤 이상으로 확대
6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	국조실	건교부	행자,예산, 지자체	'06~19년까지 매년 400억원 균특회계배정 지방채 인수 및 국유지 일부 무상양여 등

Ⅱ . 2004년도 조정실적

1. 완료과제(62건)

1. 상장주식선물거래소 이관

□ 과제 개요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중인 상장주식선물을 '04.1월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한편,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수립·시행

□ 이견 내용

- 재정경제부 : 현행 법령 및 정부 방침에 따라 선물이관 및 시장체제개편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 증권거래소 : 상장주식선물 이관에 앞서 현행 3개 거래소를 완전통합하는 방향으로 시장체제를 개편
- 선물거래소 및 부산시 : 상장주식선물만을 이관

□ 추진 경과

- 재정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부산시 등 관계기관간 협의
- 증권선물시장 개편기본방안('03.5), 세부개편방안('03.8) 확정

□ 조정 결과

- 상장주식선물은 2004년 1월부터 선물거래소에서 거래
-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주)·증권업협회내 코스닥위원회를 합병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본사는 부산광역시에 설치)를 2004년말까지 설립

- ⇒ '03.11월 세부개편방안을 토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안 등 관련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04.1.8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증권거래법 국회 의결

2. 현역사병 등 건강보험 적용 관련

□ 과제 개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03.12.22)에 따라 현역사병 등 병역 의무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허용(법제54조의2)
 - 개정 법률이 병역 의무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적용범위 구체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필요
- 요양급여의 범위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이 달라 복지부가 국무조정실에 이견조정 신청('04.1.20)

□ 이견 내용

- 국방부, 행정자치부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외래·약국만 포함
 - 민간병원 이용급증으로 군 기강 해이 및 군 의료시설 이용률 저하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간병원 위탁 진료제를 통해 입원진료 가능
 - ※ 위탁진료제 : 격·오지, 응급환자, 군병원 진료 곤란자를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전액 국가부담으로 진료토록 하는 제도
- 법무부, (해양)경찰청은 외래·약국·입원까지 포함
 - 경찰병원은 1개소에 불과하여 민간요양기관 이용률이 높음
- 복지부는 일정기간(5일)내 입원에 대해 인정토록 절충안 제시
 - 군복무자의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취지 반영
 - 입원기간 제한 및 일부 본인부담으로 무분별한 이용 통제가능
 - ※ 국방부의 위탁진료제도에서도 치료기간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 추진 경과

- '04. 2. 4 :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

□ 조정 결과

○ 병역 의무자에 대해 약국·외래·입원까지 건강보험 적용

※ 병역의무자의 실질적 의료보장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 반영, 무분별한 입원 등에 다른 군기강 해이문제는 병력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보완키로 함

○ 병역 의무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진료 수수료 면제

※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추가예산 부담 등을 고려하여, 민간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외의 위탁진료 수수료는 면제키로 함

○ 예산확보 및 배정절차를 고려하여 예탁기한을 탄력적으로 규정

- 사전예탁기한(매년 2월말)을 수정하는 방안을 복지부가 검토

※ 복지부안은 연간 소요예산 급여비용을 매년 2월말까지 공단에 예치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이 연초에 모두 배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가 문구를 수정하기로 함

- 사전 예탁치 못한 경우의 예탁기한 수정(‘지체없이’ 삭제)

※ 의무소방대의 경우 지방 교부금에서 지급. 따라서 예탁금이 부족하거나 예탁치 못한 경우에도 예산절차상 예탁금 부족분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

3. 우체국 금융 개편

□ 과제 개요

- 우체국금융이 외환위기 등 금융시장 혼란기에 급성장하자 외국계 생보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정부의 지급보장, 예보료 및 법인세 미납부 등 불공정 제기

⇒ 우체국금융의 제도개선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마련하기로 합의

□ 이견 내용

- 재경부·금감위(우체국 특혜 축소방침)
 - 기간을 정해 민영화를 추진하여 타금융기관과의 불공정문제 해소
- 정통부(우체국 특혜 축소방침 반대)
 - 우체국금융의 건전성·투명성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 추진

□ 추진 경과

- '03.7.31 : 우체국금융 발전방안 TF 구성(12명)
 - ※ 재경부 등 관계공무원 4명, 학계 4명,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4명
- '03.8~12월 : 5차에 걸친 TF회의 개최하여 개선방안 합의
 - 1차회의(03.8.22), 2차회의(03.9.25), 3차회의(03.10.30), 4차회의 개최(03.11.28), 5차회의(03.12.26)개최

□ 조정 결과

-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우체국금융 장기발전방안 마련('04. 1월)
 - 우체국금융 민영화 추진, 우체국보험의 운영과 감독/검사의 분리, 위험관리시스템 구축(2004년~), 예금회계 분리 추진 등

4. 인천 제2연륙교 건설

□ 과제 개요

- 인천 제2연륙교 건설과 관련하여 2008.8월 조기완공을 목표로 현안과제인 시공사 조기 선정 등에 대해 이견

□ 이견 내용

- 시공사의 조기 선정 문제
- 증액사업비에 대한 국고와 인천시 부담 문제
- 요금소부지 매입비와 동측 공사용 접근로 건설비용 부담 주체 결정

□ 추진 경과

- '04.2.4 : 관계기관 조정회의 개최

□ 조정 결과

- 낙찰자 선정('04.5월 중순) · 계약체결(7월말) · 착공(8월) 등의 일정 및 동측 공사용 접근로의 건설비용 부담주체(인천시)에 대해 합의
- 사업시행자 · 시공자는 혁신적 공법을 적용하고, 정부는 각종 승인과 관련한 처리기간 단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상호 합의
- 증액사업비에 대한 국고와 인천시의 분담액, 요금소 부지의 매입비 부담주체는 2월중(증액사업비 추계후) 관계기관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합의

5. 쓰레기 소각장 건설 관련

□ 과제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지역주민 및 인접지자체 반대 등으로 일부 지연되는 사례 발생

□ 이견 내용

- 인접 지자체 및 주민의 소각시설 입지반대(속초시, 경주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행정절차 관련 소송제기로 사업이 지연(계룡시, 서산시)

□ 추진 경과

- 소각시설 건설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 중앙부처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여 사회적 갈등조정과제에서 제외('04.2)
- 환경부는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관 회의개최('03.5, '03.10) 및 현지 지도·방문('03.7)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독려
-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분쟁조정 신청, 국고보조사업 취소 및 사업 유보 등으로 갈등 종결

□ 조정 결과

- 속초시 : 사업유보
 - 인근지자체(양양군)와 시설입지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하여 환경분쟁조정을 신청('03.12.2)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취소('03.12.30) 및 조정종결

*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 검토

○ 서산시 : 사업취소

- 소각장 설치예정지 인근주민의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소각장 설치유보('03.8.25) 및 향후 대체시설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조정종결

○ 계룡시 : 조정과제 제외

- 민투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소송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업이므로 사회갈등 조정과제에서 제외하고 조정종결

○ 경주시 : 정상추진

- 소각장 설치예정지 인근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주민대표 간담회 등을 거쳐 입지를 결정·고시('03.12.11)하여 정상추진 됨에 따라 조정종결

6.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합리화

□ 과제 개요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규제를 합리화
 - 현행 산집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제한
 -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규제는 최대한 조기에 완화 추진

□ 이견 내용

- 산자부 :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규제완화
 - 다만, 첨단업종 공장증설과 외투기업 신·증설 기한연장과 같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추진
- 재경부 :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규제는 최대한 조기에 완화

□ 추진 경과

- '03. 5 재경부·건교부 국장급 회의 개최
- '03. 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정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
- '03.12 경제장관간담회
 - 첨단업종의 공장 증설,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결정
- '03.12 산집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규제위 및 법제처 심사('04.1.20 ~ 1. 30)
- '04.2.12 산집법시행령 차관회의, 04.2.1국무회의 통과
- '04.2.25 동 법시행령 공포 및 시행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한 규제 개선 완료

□ 조정 결과

- 삼성기흥공장 및 쌍용 평택공장증설 허용
- 외국인 투자기업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1년 연장

7. 자격기본법 개정

□ 과제 개요

- 교육부의 자격기본법개정안 입법예고('03.6.5 ~ 6.25)후 노동부와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양부처의 이견사항에 대한 협의 곤란으로 조정신청('03.11.28)

* 국가직무능력표준 용어 해석 등 10개 사항

□ 이견 내용

쟁점사항	노동부	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 용어 및 정의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국가직업능력표준'으로 변경 - '직업능력'에 초점	○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절, 변경불가 - '직무능력'에 초점
자격체계 구축	○ 자격체계 구축관련 내용 삭제 - 선결조건 마련후 법에 명시	○ 자격체계 삭제 불가 - 자격과 학력의 연계설정 필요
자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설치	○ 전문위원회 삭제	○ 전문위원회 삭제 불가
민간자격 공인의 주체	○ 주관부처 장관	○ 국가

□ 추진 경과

- '03.12.3, 12.30, '04.2.27 :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 개최
- '04.3.8 : 조정결과 부처 통보

□ 조정 결과

- 국가직무능력표준 용어는 '직무'를 기준으로 개발
 - 개정(안)대로 '자격체제' 관련조항 존치
 - 전문위원회는 법령에 근거없이도 설치·운영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 삭제
- ⇒ 조정안대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04.8.30)

8. FTA이행특별법 제정

□ 과제 개요

- 농업인들의 한·칠레 FTA협정체결에 대한 국회 비준 반대로 「FTA이행특별법」 제정 및 「FTA 이행지원기금」 설치 지연

□ 이견 내용

- 농림부
 - 한·칠레 FTA 발효에 따른 농가피해에 대비한 농업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
- 농민 등 관계집단의 의견
 -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설득으로 품목조합 및 단체 중심으로 비준지지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나, 전농 등 일부 농업인 단체는 여전히 반대입장 고수
 - 일부 농민단체의 한·칠레 FTA비준반대에 국회에서 부담을 느껴 FTA지원특별법 제정이 지연

□ 추진 결과

-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등을 통한 FTA 지원특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7.23)
 - '04예산안에 특별기금 출연금 1,000억원 반영
 - 농특세법, 본회의에서 10년 연장으로 의결(12.22)
 - 농어촌복지특별법·부채경감법, 농해수위 의결(12.19)
-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및 특별법 설명·설득 추진
 - 농·정협의회를 구성, 농업인단체와 타협방안 모색(8.8~11.7, 5회)
 - 전농, 한농연, 과수연합회 등 농민단체와 지속 협의(7.31~11.26, 65회)
 - 전국 시장·군수·기초의회의장 대상 농업농촌종합대책 설명회 개최(12.15)

- 범정부적 FTA추진계획에 따라 FTA비준추진 상황실 설치(10.1)
 - 농민단체 및 국회(농해수위)에 대한 설득노력 강화
- 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홍보대책마련 및 국회 설득
- 부처간 정책 조정 추진
 -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 합의(11.7)
 - 부채대책의 금리인하 등 농민단체 요구사항 상당부분 수용
- 국회·정당·정부·농민단체 연석회의 개최
 - 국회의장, 총리·부총리·관계부처장관·농해수위 3당간사·4당 정책위 의장 및 농민단체(농단협, 과수연합회) 연석회의 개최(12.11)
 - 국회의장, FTA반대 농민단체(전농 등 5개단체) 면담(12.17)
 - 국회의장, 농해수위 이양희 위원장 및 위원 면담(12.18)
 - 국회의장, 4당총무 및 원내대표 회동 현안사항 협의(12.22)
 - 장관, 정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 면담('04.1.29)
 - 국회의장 정당대표 오찬회동, FTA비준안 2.9처리키로 합의

□ 조정 결과

- FTA이행특별법 국회 통과('04. 3. 2)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시책 일정기간 시행, 폐업지원금 지급시책 일정기간 시행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
 - 7년간 총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
 - * 2004.4.1 시행

9. NEIS 시행 관련

□ 과제 개요

-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NEIS 전면시행과 관련, 학생 정보인권 침해 우려로 학교현장 및 사회적 갈등 초래

* 전교조 및 일부 시민단체, NEIS 폐기 주장('03.2.29)

* 국가인권위,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 권고('03.5.12)

□ 이견 내용

○ 교육부

- 교육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및 대 국민서비스의 질 제고

○ 전교조 등 교원단체

-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인권침해 우려

□ 추진 경과

-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운영('03.7.7~'04.2.29)

- NEIS 27개 영역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 운영 등 제반사항 검토후 시행방안을 정부에 건의('04.2.24)

-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NEIS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운영방안에 대한 정부방침 결정('04.3.8, 국무조정실)

- 3개 영역의 DB를 분리하여 16개 시·도 단위로 운영 등

* NEIS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천명 및 논란 조기 차단

□ 조정 결과

- 컨설팅 자문위원회 구성, 최적의 시스템 구축방안 모색('04.5.21~8.20)

- NEIS중 교무·학사 등 3개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방안 확정('04.11.29)

10. 폭설피해복구 대책 관련 이견 조정

□ 과제 개요

- 3월초 폭설로 중부·경북지역 비닐하우스, 축사 등 재산 피해 발생(6,734억원), 권한대행의 폭설피해 복구현장 방문(3.14)후 피해농가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이견

□ 이견 내용

- 농림부
 - 자동화 하우스 복구지원 단가는 소비자 물가지수(13.2%)를 반영한 만큼 인상하고 2ha 이상 비닐하우스, 1,800㎡이상 축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 행자부·예산처
 - 자동화 하우스 복구지원 단가는 6.3%를 반영하고 대규모 비닐하우스 및 축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 현행 융자지원(70%) 제도를 유지

□ 조정 경과 및 결과

- 사회수석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1급회의 개최(3.19)
 - 자동화 하우스 복구지원단가는 현 시가와 가격격차가 큰 점을 감안하여 13.2% 반영
 -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현행대로 융자 지원. 다만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태풍매미시 소상공인 지원 전례에 따라 특별위로금(200만원) 별도 지원

11.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관련 이견

□ 과제 개요

- 정보통신부에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산자부에서 반대

□ 이견 내용

- 정통부 : 위치정보는 보호의 실익이 지대하므로 별도 법률이 필요하며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가 필요
- 산자부 : 기존의 통신망법 개인정보 규정에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위치정보만을 별도로 법제정하는 것은 불필요

□ 추진 경과

- '04.3.25 : 재경부 주관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의견수렴
- '04.4.9 : 재경부 주관,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

□ 조정 결과

- 산자부에서 정통부의 독자법률 제정반대 철회
- 위치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 마련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위치정보 등급 지정시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12. 의왕 ICD 기지 확장

□ 과제 개요

- 수도권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여 수도권 물류 거점시설 부족문제 대두
 - 2011년 수도권 컨테이너 물류시설 98만평 부족 예상

□ 이견 내용

- 건교부 : 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달한 의왕 ICD시설의 우선 확장 추진
- 의왕시 : 도시개발구상 차질, 공해발생, ICD관리를 위한 재정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 추진 경과

- '02.11.~ : 건교부에서 관계기관 회의 등 해결 추진
- '04.1.12 : 국조실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
 - * 참석 : 건설교통부 도시국장, 수송물류심의관, 행자부 지방재정경제국장, 의왕시 부시장, (주)경인ICD 사장

□ 조정 결과

- 지역 반대여론을 감안하여 의왕ICD 확장여부는 단기적으로는 검토하지 않기로 함
 - 다만, 현 ICD의 운영효율화*를 통하여 화물물동량 처리
 - * 컨테이너 적재단수 향상(평균 3.5단→4.4단, 23만TEU 증가), 컨테이너 장치면적 확대(8천평, 14만TEU 증가)로 총 137만 TEU 처리가능
 - * 의왕ICD 예상물동량(단위:만TEU) : 97('03)→115('06)→138('08)
-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물동량 추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의왕ICD를 포괄하는 「수도권남부 내륙화물기지」 건설방안 추진

13. 수도권 그린벨트내 임대주택건설

□ 과제 개요

- '04.3.19 환경부가 GB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건교부의 사전환경성 검토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건교부가 조정요청

□ 이견 내용

- 환경부 : 선 GB해제절차 완료후 임대주택단지 지정추진
- 건교부 : 선 임대주택단지 지정추진후 GB해제 절차 완료

□ 추진 경과

- '04. 4. 14 :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GB내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추진절차에 이견발생
- '04. 4. 21 : 국조실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 GB내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국책사업인정 심의 후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방안을 논의
- '04. 5. 4 : 추진방안 합의
 - 4.21 논의안을 바탕으로 주민의견수렴을 강조하는 수정방안 합의

□ 조정 결과

- 주민 및 지자체 의견수렴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책사업 심의후 환경부가 사전환경성 검토

< 조정합의에 따른 추진절차 >

- 주민·지방의회 및 지자체 의견청취→국책사업 인정여부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전환경성 검토(환경부)→지구지정절차 추진

14.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개선

□ 과제 개요

- 전략기술의 수출에 대해 산업자원부(대외무역법 제21조)와 과학기술부(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5조)가 중복으로 고시하고 있어, 법집행의 혼란과 기업부담의 가중을 초래

□ 이전 내용

- 산업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전략물자에 대해 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 2002-123호)
 - 공고 통합안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되, 산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제정할 때 기술에 관한 부분은 과기부장관과 협의
- 과학기술부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5조에 근거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 고시
 -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자부장관은 통합공고를 할 수 있으므로, 전략기술수출공고의 명칭을 전략기술수출고시로 변경시키되, 독자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산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인용

□ 추진 경과

- '04. 5. 7 : 관련부처 실무자회의 개최
- '04. 5.10~14 : 관련부처 담당 국·과장 협의

□ 조정 결과

- 대외무역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공고”와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공고”를 통합하여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로 제정·고시

15. 골재수급 안정대책

□ 과제 개요

- 수도권 바다모래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용진군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골재채취 반대로 채취허가 절차 중지('04.2)
 - 태안군도 용진군 영향으로 '04년분 채취허가 절차 중지('04.3.24)

□ 이견 내용

- 용진·태안군은 골재채취시 환경영향평가, 사업자가 납부하는 점·사용료 인상, 점·사용료의 주민 위주 사용 등 요구하며 채취허가 재개에 반대

□ 추진 경과

- 건설시장의 동요가 사회문제화 되어 '04.3.2일 관계부처, 환경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회의 6회, 주민면담 3회, 현장방문 2회, 관계기관협의회 3회를 거쳐 '04.5월 종합대책 발표
 - * 종합대책시행을 위해 국조실 경제조정관 주재 점검회의('04.9.20) 등 개최

□ 조정 결과

- 용진·태안군 주민지원 사항과 공급원 다변화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합의 도출
 - 해수욕장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점·사용료(10→30%) 인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채취 확대, 골재 수입방안 추진 등
 - * '04.5.25일 국무회의에 '골재수급안정대책 보고'
- '04.12월 용진군, '05.1월 태안군의 채취허가 재개와 함께 EEZ채취, 부순모래 공급확대, 골재수입 등 공급원 다변화로 수급안정 실현

16.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 관련

□ 과제 개요

- 집단 우량농지(28천ha)와 수자원 확보 등을 위해 '91년 착수
 - '99~'01년까지 민관공동조사 등을 거쳐 정부방침 결정('01.5)
 - '04년까지 1조7,483억원을 지원하여 방조제공사 92% 추진
-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 갈등은 환경단체와 전북도간의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임
 - 본 사안은 서울행정법원이 '03.7.15 새만금사업 공사중지 가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갈등 촉발

□ 이견 내용

- 환경단체 등에서는 갯벌보전 등을 위해 공사중단을 요구
 - 새만금 정부조치계획 취소 소송('01.8.22)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03.6.12)을 제기
- 전북지역 주민들은 지난 2년여간의 민관공동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01.5월 확정된 정부조치계획대로 환경대책을 면밀히 추진하면서 진행중인 공사를 계속하기 원함

□ 추진 경과

- '03. 6.12 : 조경훈 등 3인, 새만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03. 7.15 : 재판부에서 1회 변론후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집행정지 결정 ⇒ 농림부,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03.7.15)
- '03.9~11 : 서울고법, 4회심문·현장검증
- '04. 1.29 : 집행정지 결정 취소 ⇒ 원고측, 대법원에 재항고('04.2.5)
- '04. 3. 5 : 본안소송과 관련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감정결과 후로 재판을 연기함에 따라 갈등상황 일단락

□ 추진 결과

- 서울고법은 4회심문·현장검증을 거쳐 집행정지결정 취소('04.1.29)

[결정사유]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방조제공사를 미리 중지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방조제공사는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아님
 - 원고중 최열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부적격함
- 서울고법 판결에 대하여 조경훈 등 3인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04.2.5)

⇒ '05.1.12일 원고측이 소를 취하하여 종결

17.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과제 개요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관련 각종 민원의 해소 및 법 운용상 일부 미비점 보완 필요

□ 이견 내용

- 교육부
 -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개발사업자’로 변경, 원인자 부담적용
 -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규모를 현행 ‘300세대이상’에서 주택법상 사업승인기준인 ‘20세대이상’으로 개정하여 형평성 제고
 -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확보의무 해태시 제재조치(공사중지조치 등) 신설
- 건설교통부 및 개발사업 관련기관(대한주택협회 등)
 - 부과대상자 변경, 부과대상 확대 및 제재조치 신설 반대

□ 추진 경과

- ‘03.12. 2 : 협의회 개최
 - 건설교통부 및 개발사업 관련기관(대한주택협회 등)의 ‘개정반대’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개정’ 의견 대립
- ‘04.2.6~5.19 : 건설교통부와 실무 협의
- ‘04.5.19 : 협의 완료

□ 조정 결과

-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 100세대이상
 - 부과대상자 변경(분양받는자 → 개발사업자) 및 사용용도 확대에 동의
 -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해태시 제재조치 신설 동의
- ⇒ 규제심사 통과(‘04.5.28), 국회 제출(‘04.7.14) 및 국회의결(‘05.3.2)

18.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 과제 개요

- 행정자치부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에 ‘복무감사’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중앙인사위, 감사원 등 관계기관간 이견이 있어 관계부처 실·국장회의에서 이견을 조정

【쟁점사항】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제8조의3)

- 행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복무상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 징계요구 가능
- 인사감사규정 중 징계에 관한 감사(제6조 7호) 및 복무에 관한 감사(제6조 9호) 규정은 삭제

□ 부처입장 및 이견사항

- 행정자치부
 - 「정부조직법」상 ‘복무’는 행자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주무부처로서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복무감사’ 신설 필요
- 중앙인사위
 - 현행규정상 인사감사기능은 중앙인사위 소관이므로, 복무도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 규정상 인사행정 개념에 포함
- 감사원
 - 대통령령으로 감사권한을 신설하는 것은 감사원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법제처
 - 대등한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으며, 사무관장과 감사권은 별개임

□ 추진경과

- '04.3.11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포
 - 「정부조직법」 제33조 : 행자부 기능으로 '공무원의 복무' 명시
- '04.4.20 행자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요청
- '04.5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부처협의 중 '복무감사'와 관련, 감사원·인사위 등에서 이견 제기
- '04.5.21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통해 부처간 이견조정

□ 조정결과

-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 개정없이 '복무감사' 신설 곤란
 - 「인사감사규정」 제6조 제7호 및 제9호는 현행유지
- 행자부가 복무관련 주무부처로서의 효율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복무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기능 부여 필요
 - '복무감사'가 아닌 '복무 확인·점검'으로 하고, 징계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토록 함
- '복무'의 개념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하여 운영할 필요
 -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으로 복무의 개념을 열거하기로 함

19. 서해 이북어장 어선 조업통제 주관기관

□ 과제 개요

- 서해 어로한계선이북어장의 조업통제 책임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해수부(해경)간 이견사항 조정

□ 이견 내용

- 국방부는 해군→해경으로, 해수부(해경)는 현행대로 해군관장 주장

□ 추진 경과

- 해수부는 소형선박의 안전을 위한 항해 및 어로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조업규칙」(국방부·행자부·해수부 공동부령)을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어선안전조업에관한법률』로 제정을 추진중
 - 서해 어로한계선이북어장의 조업통제 책임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이견
- '02.10월 이후 수차례 관계기관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자 해수부는 국조실에 조정신청
- '03.11.7 해수부에서 국조실에 조정신청한 이후 6차례의 조정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국방부·해수부(해경)는 기존입장 견지
 - 국방부는 군이 민간어선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군의 기본업무 수행상 곤란하며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입장
 - 해수부(해경)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군의 통제가 바람직하나, 추가 예산·인력이 지원되는 경우 연평어장은 해경 관장이 가능(그외 어장은 어장환경상 곤란)하다는 입장

- * 법제처는 법률 규정시 위헌소지는 없으며, 정책결정사항이라는 입장
- * 예산처와 행자부는 추가적 예산·인력 소요에 대해 반대

○ '04.4.9 국방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지시 이후 국조실에서 새로이 조정안을 마련 협의 추진(4.23)

※ 조정(안) : 해경의 함정·인력 확보 등 여건이 갖추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어선조업통제 업무를 해군→해경으로 순차적으로 이관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이관을 주장, 해수부(해경)는 연평어장은 이관이 가능하나 백령 등 기타 어장은 이관이 곤란함을 주장

- 이견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관계기관 공조하의 어선안전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어 국조실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방부·해수부(해경)와 실무 협의('04.5월)
 - 향후 남북한간 정치·안보상황의 개선 또는 관계부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법률 제정을 추진
 - 다만, 법률 제정시까지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상의 기관별 임무를 성실히 수행(중국어선 공조단속 및 꽃게 조업 합동 대책반 운영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

□ 조정 결과

- 협의결과에 따라, 해수부에서 조정철회 공문 시행('04.6.4)

20.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 통계 조정

□ 과제 개요

- 중소기업 인력부족 통계를 노동부와 중기청이 각각 조사 발표함으로써 혼선을 초래하고 관련 정책 추진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

□ 이견 내용

- 노동부
 - 노동력수요조사는 76년부터 실시되어 있어 시계열이 풍부하고 중소기업에 포함한 모든 기업·업종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통계는 노동부 조사결과를 정부의 공식 통계로 활용할 것을 주장
- 중기청
 - 중기청은 조사시기·내용 변경 등을 통해 양부처의 통계에 차별성을 부여하면서 병용할 것을 주장
- 통계청
 - 한 부처에서 통계를 작성·공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사시점을 달리해서 양부처의 통계를 병용할 것을 주장

□ 추진 경과

- '01.5.8 : 국무조정실 주관 관련부처 회의 개최
 - 양 부처의 조사를 차별화할 것을 제안

- '03.7.24 : 재정부 주관, 통계조정회의 개최
 - 중소기업 인력 부족 통계는 노동부 통계를 정부통계로 지정 하되 통계개전시 중기청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재정부 조정안을 제시
- '04.3.22 : 재정부 주관, 통계조정회의 개최
 - 중기청, 노동부, 통계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에 통계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
- '04.5.17 : 통계청 주관으로 관계 부처간 조정회의를 개최
- '04.5.31 : 통계청이 통계법 제6조에 근거(통계작성사무의 개선 요구)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그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조정 완료

□ 조정 결과

- 노동부와 중기청은 시기를 달리하여 조사를 실시 (노동부 상반기, 중기청 하반기)
- 조사결과 공표전 통계청은 양기관의 통계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공표중지, 작성중지 등을 요구하고 이를 노동부, 중기청에서 수용

21. 배전분할 관련

□ 과제 개요

-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1단계 발전분할에 이어 한전의 배전/판매 부문을 분할하여 도매경쟁체제 도입
- ※ 1단계 : 발전경쟁 → 2단계 : 도매경쟁 → 3단계 : 소매경쟁

□ 이견 내용

- 산업자원부
 - 현재는 발전부문에는 경쟁이 도입되었으나, 전기를 수요하는 배전/판매 부문은 여전히 한전의 독점체제로 유지되어 불완전한 경쟁상태이므로 배전/판매부문의 분할을 통해 완전한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
- 관계집단의 의견(전력노조)
 - 배전분할을 할 경우,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로 인한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

□ 추진 경과

-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를 통해 “공동연구단 구성·운영 (‘03.9-’04.5)
- 공동연구단, 연구결과를 제69차 공공특위에 보고 (‘04.5.31)
 - * 주요 연구결과 : 배전분할 중단, 배전부문에 독립사업부제 도입
- 제70차 노사정위 공공특위, 배전분할 관련 정책권고 결의 (‘04.6.17)
- 산자부, 노사정위 공공특위 정책권고사항 수용 (‘04.6.17)

□ 조정 결과 (주요 결의사항)

- 배전분할 중단,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 도입

22. 상표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

□ 과제 개요

- 상표법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과 농림부·해수부 이견 조정

□ 이견 내용

- 농림부·해수부
 - 상표법 개정(안)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와 중복
 -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제가 既 설치되어 있으므로 미비점이 있다면 동 제도의 개선으로 보완
- 특허청
 - 양 제도는 요건 효과 면에서 구별되어 현행 법체제 내에서 충돌 가능성 희박

□ 추진 경과

- '04. 4. 8 : 농림부·해수부, 특허청 등 관련 부처 회의
- '04. 5.15 : 농림부·해수부 수정안 제시
- '04. 5.24 : 재경부에서 조정안 제시
- '04. 6.22 : 법제처,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재경부 등 관련 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재경부 조정안을 수용기로 결정

□ 조정 결과

- 다음의 내용을 조건으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 합의('04.7.2)
 -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③항 신설
 - “특허청장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장 중 농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대 상품목의 단체표장출원의 심사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 특허청은 향후 농산물품질관리법(농림부)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해양수산부)을 개정하여 WTO/TRIPS협정 등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개정할 경우 상표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적극 협력
-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가 이루어지는 '05년 상반기부터 개정 상표법을 시행할 예정

23.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

□ 과제 개요

- 2000. 11월 지상화 건설방안에 대하여 고양시의 지하화 요구로 도시계획시설변경 협의가 되지 않아, 감사원의 중재로 지상으로 건설하되 도시기능상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01.7.6)
- 재차 고양시 의회 및 일부 지역주민의 지하화 요구로 인하여 사업 추진지연

□ 이견/갈등 내용

- 건설교통부
 - 선로연변 경관과 조화가 잘되고 친환경적이며 방음효과가 우수한 OPEN터널식 방음벽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보완설계 추진중에 고양시에서 "경의선 복선화사업 고양지구간 통과 법안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보완설계를 중단하고, 용역결과 및 고양시 요구에 대한 보완여부 결정후 시행 예정이었으나,
 - 고양시가 '03.10월 제시한 방안(여객열차 지하, 화물열차 지상 건설)은 현 지상철도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새로운 문제점(사업비증가, 개통지연 등)만 발생하므로 수용 곤란
- 고양시, 고양시의회, 일부지역주민
 - 지하화 요구와 병행하여 고양시장과 시의회에서 시설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철도청에 요구하기로 합의하고 철도청에 대안 제시('03.10)

□ 추진 경과

- 경의선 복선전철 고양시 구간 추진관련 합의서 교환('01. 7.6)
- 고양시 구간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결정 고시(건교부고시 제 '02-26호, '02.6.20)
- '02. 7월부터 보완설계중이었으나 고양시에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보완설계 중지('03.4)
- '03.10.14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정대안 제시(고양시→철도청)
 - 주택밀집지역인 백마-탄현구간(6.5km) 여객열차는 지하로, 화물열차는 지상에 현시설을 활용하되, 2008년까지 개통요구
- '04.3.11 건교부 광역교통국장의 고양시장 및 시민대책위 면담
 - 지상화시 환경개선시설 추가비용과 지하화시 추가비용을 정밀 검토 후, 4월 초 재협의
- '04.4.22 건교부 광역교통국장 주관 “건설방안 설명·토론회” 개최
 - 고양시장이 복층(추가비용 6,065억원 부담)방안 또는 지상조기 개통방안을 6월말까지 결정

□ 조정결과

- 고양시, 지하화요구 시민단체는 건설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의선복선철도 전구간 지상화 건설추진 방침을 수용
- 건설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는 복선철도지상화 건설시 예상되는 도시의 양분방지를 위한 평면철도건널목 입체교체화시 2차로 설계를 4차로 변경확장 시공 및 철로변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설치구간 연장
- 환경친화적 철로변 녹지대 조성, 보도육교설치및 주민 편의를 위한 생태공원조성

24.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 과제 개요

-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03.9) 및 개정안 입법예고('04.4.13~5.3)
 - 자연경관보호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제에 대한 이견쟁점화
- 건교부가 동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심각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통보하는 등 관련부처에서 실무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재의견 제출('04.5)
 - 건교부 소관 규정과 중복·상충되지 않도록 정립 등(건교부)
 -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자연경관보호구역 내 광업시설 허용 등(산자부)
 -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은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등(산림청)
- 환경부가 동 개정안 미합의사항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 이견조정신청('04.5)

□ 이견 내용

- 자연경관 훼손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자연경관보호구역' 지정, '자연경관심의제도' 도입,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 개선 등 법개정이 필요(환경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경관보호 규정과 중복되며, 정부규제완화를 위해 준비중인 「토지규제합리화방안」에 역행(건교부)
-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 친환경적인 광업개발을 허용하는 방안 필요(산자부)
- '자연경관보호구역' 지정은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제한지역'과 중복되어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으며, 생태계보전지역 확대로 임산물 생산 등 산림관리업무가 제한(산림청)

□ 추진 경과

-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개최(2회, '04.5.24, 6.2)
 -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산림청 등 4개 부처 담당과장 참석
(수질개선기획단 기획총괄부장 주재)
- 국무조정실 조정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환경부 수정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합의 도출('04.6.23)

□ 조정 결과

- 자연경관보호구역의 지정 관련
 - 별도의 자연경관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기존의 생태계
보전지역과 통합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통합·지정
- 자연경관심의제 도입 관련
 - 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지자체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 대신 “환경부장관의 지침 등”에 의해 경관을 고려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제도 개선 관련
 -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세분화하되,
전이구역을 “핵심 또는 완충구역 내의 자연마을”로 국한하여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
 - 생태계보전지역 내 완충구역에서도 현행과 같이 광산개발을 허용
- 생태마을 지정 관련
 - 동일한 성격의 '생태마을'과 '산촌진흥지역'의 중복규제를 방지
하기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외에는 산촌진흥지역을 제
외한 지역에만 지정

25. 한약재 품질인증제 도입 관련

□ 과제 개요

-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재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우수한약품질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자, 농림부에서 “한약재 재배” 분야는 농림부 소관이므로 삭제 요구

□ 이견 내용

○ 보건복지부

-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보아 재배단계부터 관리함으로써 저가 식용한약재가 고가의 한약재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
- 농림부의 농산물품질인증제도 등은 한약재를 식용으로 보아 농약잔류허용치 등 안전성 검사 위주인 반면, 복지부의 한약 품질인증제는 약효성분함량 등 위주 검사 실시

○ 농 림 부

- 한약재 재배, 품종보존, 품질인증은 현재 농림부가 체계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므로 농림부에서 지속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
- 현행 농림부의 약용작물 재배·생산, 품질인증 과정에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소비자, 한의사, 한약제조업소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해 보완 추진 가능

□ 추진 경과

- 국무조정실 주관(복지심의관 주재)으로 관계부처 회의 3회('04.6.12, 7.7, 7.19)개최

□ 조정 결과

- 한의약육성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농림부 등 관계부처 포함
-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수립 관련
 - 농림부는 “한약재 재배” 사항 삭제 요구, 복지부는 심의기관인 “한방산업육성협의회”에 농림부가 참여하므로 반대
 - ⇒ “한약재 재배”와 관련해서는 농림부의 의견을 듣도록 조정
- 신설되는 한약진흥재단의 사업 범위 관련
 - 농림부는 우수한약재 재배, 한약재 품종 보존·연구 관련 삭제 요구
 - ⇒ 복지부장관이 재단의 사업계획서 승인시 동 사항에 대해 농림부의 의견을 듣도록 조정
- 우수한약관리기준 제정 및 우수한약관리기관 지정 관련
 - ⇒ 한약재 재배 관련사항은 농림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조정

26. 국가관련 보유헬기 안전관리 사무 조정

□ 과제 개요

- 건교부는 국가 소유 항공기를 항공법에 등록하여 안전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찰,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 반대

□ 이견 내용

- 건설교통부
 - 경찰헬기도 안전관련사항은 항공법에 등록하되, 운항특례를 폭넓게 인정하여 임무수행 보장
- 경찰청, 산림청, 방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 기관 고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헬기와 동일하게 각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기존 항공법 유지)

□ 추진 경과

- '04.5.6, 6.3, 6.14 : 국조실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
- '04.8.9 : 국조실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기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이견 조정

□ 조정 결과

- 경찰청(해경)은 항공법 등록을 면제하되, 경찰청 훈령(경찰항공 운영규칙)을 항공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등록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 산림청, 소방방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헬기는 항공법 등록을 추진하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특례조항 규정

27. 철도대학 운영방안 관련 이견조정

□ 과제 개요

- '05.1월 철도청의 공사전환에 대비하여 철도청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철도대학의 운영방안 마련 필요

*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 : 7개학과(3년제 5개과, 2년제 2개과), 재학생 수 636명, '04년 예산 33억 6천만원

- '04년 관계기관 협의(4.26, 6.15)를 통해 철도대학의 민영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협의 지연

□ 이견 내용

- 건교부 · 철도청 · 철도대학 : '05년 이후 단계적 사립화 추진
- 예산처 : '05.1월 이전 매각절차를 진행

□ 추진 경과

- '04.8.3 : 국조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철도대학 사립화 시기 등 향후 철도대학 운영방안 논의
* 참석 : 교육부 · 건교부 · 예산처 담당국장, 철도대학 학장

□ 조정 결과

- '05년 1/4분기내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대학 사립화 관련 정부방침 및 추진계획 확정
- 국비생 제도는 폐지하되, 現국비생은 신뢰보호차원에서 학비 면제
- 철도대학 운영비는 건교부 예산에 계상

28. 중고휴대폰 수거, 재활용 관련

□ 과제 개요

- 휴대폰 교체주기 단축과 번호이동성 시행으로 중고폰 양산('03년 10.4백만대)
 - 체계적인 수거·재활용 필요('04.7.1 부터 시범사업 실시, 수원시)
- 휴대폰 생산방식(OEM, ODM 등)에 따른 재활용 의무주체 등에 대하여 관련부처 및 업계간 이견

□ 이견 내용

- 산자부·제조사
 - ODM(판매자 상표부착 휴대폰 생산방식) 계약에 의한 휴대폰의 재활용 의무주체 및 회수비용 분담은 상호표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판매업자(이통사) 책임 주장
- 정통부·이통사
 - 이통사는 판매업자가 아니므로 판매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제조를 담당하는 휴대폰 제조사 책임 주장

□ 추진 경과

- 국조실 산업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조정회의 4차례 개최(2.12·3.24·6.4·7.15)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조정안 마련
 - * 환경부 주관 업계 설명회에서 양 업계(제조사·이통사)도 정부안 수용

□ 조정 결과

- 재활용의무 주체 : 제품생산에 실질적으로 주된 영향을 미친 자
 - ※ 현행 법령하에서 이통사에게 재활용의무량은 부과되지 않음
- 판매자의 회수의무범위 : 대리점에서 집하장까지의 운반포함
- 판매자의 보상판매 : 수거비용이 아닌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
- 재활용 시범사업에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적극 참여키로 함

29. DMZ 세계유산 지정 추진

□ 과제 개요

- 환경부에서는 2001년부터 DMZ 일원의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한 훼손방지를 위해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 일부 NGO를 중심으로 DMZ의 자연환경보전 개념에 ‘평화’의 개념을 추가하여 ‘세계유산’ 지정을 거론
 - ※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에서 DMZ의 세계유산지정 추진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04.7)
-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부처별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 국가정책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 추진

□ 이견 내용

- 환경부 : DMZ 일원을 자연생태계보전 차원에서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
- 문화재청 : 생태계와 전쟁유적이 어우러진 DMZ 일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UNESCO ‘세계유산’으로 지정 필요
- 문화부 : 현행법(군사시설보호법·접경지역지원법)상 DMZ 일원 주민에 대한 규제가 많으므로 추가규제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

□ 추진 경과

- '04.7.22 : 국조실 수질개선기획단 주관 관계부처 회의
 - 환경부, 행자부, 건교부, 국방부, 통일부, 문광부, 문화재청 등 7개 부처 참석

□ 조정 결과

-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유산’ 지정은 향후 남북간 합의에 의해 추진방법(병행, 선택 등)을 결정
- 현재 수립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5~’20)」에 DMZ 일원 보전·이용방안 포함(건교부)
- DMZ 관련 용역결과는 관계부처가 공유
 - ※ ‘DMZ 일원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실태 및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04.4-12월, KEI) 중간보고회에 통일부, 국방부, 행자부 및 관계전문가 등 10여명 참석(’04.10.13)
- DMZ 이용과 관련 관계부처, 민간단체 등의 경쟁적인 업무 추진 방지

30. 고속철도, 새마을호 경로할인제(30%) 추진

□ 과제 개요

- 고속철·새마을호 경로할인 추진과 관련, 철도청의 영업손실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및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할인적용 추진이 지연
 - 복지부 입법예고('04.4.8) 및 총선 과정에서의 공약(복지원년 선포 및 어르신 복지시책 발표, '04.4.3) 등으로 30% 할인을 당연시 하고 있던 노인단체는 추진지연에 대해 반발

□ 이견 내용

- 건설교통부·철도청
 - 보상이 없다면 철도운영자의 경영악화가 초래되므로 곤란
 - 예산은 건설교통부 일반회계로 편성하거나, 노인복지법에 따라 복지부가 철도청에 권유하고 할인액에 대해 적절지원
- 보건복지부
 - 경로우대, 노후세대의 소득 미약 등을 고려하여 조속추진이 필요하므로 철도청의 독자적 할인방안 우선검토 필요
- 기획예산처
 - KTX와 새마을열차의 보편적 할인에 대한 재정지원 곤란

□ 추진 경과

- '04.7.16 :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1차 회의
 - 노인들의 고속철도 이용현황 및 할인에 대한 효과분석, 복지부 예산조정 등을 통한 영업손실 보전방안 등을 추가 검토 후 재협의기로 결정
- '04.7.30 : 국조실 주관 2차 회의에서 조정 완료

□ 조정 결과

- 고속철 등 경로할인에 대해 철도청이 철도사업의 마케팅 측면과 경로우대 측면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적용키로 결정
 - 구체적 할인방안은 철도청이 ‘주중(월~금 오전) 30% 내외의 할인’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검토하되
 - 철도여객 운송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간대별, 요일별 차등할인 등 다양한 방안을 탄력적으로 검토키로 함
 - '04.8월말까지 철도청이 최종 할인방안을 마련하고, 전산프로그램 수정 등 기술적 준비과정을 거친 후 '04.10월중 시행키로 함
- ⇒ 철도청에서 10.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고속철 및 새마을호 이용요금을 주중 30% 할인키로 결정·발표(8.19)

31. 인천공항 추가역사 신설 관련

□ 과제 개요

- 건교부는 동북아 물류 Hub 구축을 위해 공항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나, 지자체의 驛 추가건설 요구로 공사 지연
 - * 인천시(청라·용유·영종), 서울시(마곡·상암), 고양시(고양) 등 6개역
- 역사신설 관련 사업비 부담 비율에 대해 건교부와 지자체간 이견

□ 이견 내용

- 건교부·예산처 : 지자체가 전액 부담 주장
 - 인천공항철도 건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는 사업비 분담 없이 인천공항 철도건설의 혜택을 누림
- 서울시 : 인천공항철도는 국가기간 사업이므로 국가가 전액 부담
- 인천시 : 국가 50%, 고양시는 국가 75% 부담

□ 추진 경과

- '04.8.26 : 국조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
 - * 참석 : 건교부 철도정책국장,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서울·인천·고양시 담당국장, 인천공항철도(주) 부사장

□ 조정 결과

- 청라·용유역은 역사 신설 추진, 사업비 분담문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건교부·인천시간 세부 협의
- 영종·마곡·고양역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여 역사기초시설 설치, 향후 총사업비 분담 문제는 관계 기관간 별도 협의
- 상암역은 공항철도 수색역과 900m 거리에 있어 역사 신설 불가

32. 이동전화 요금 인하 조정

□ 과제 개요

- 재정부에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추진하자 정통부에서 반대

□ 이견내용

- 재정부 :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인하 필요
- 정통부 : 투자 재원마련과 후발업체의 인하여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 추진 경과

- '04.3.11 : 물가대책회의에서 경쟁의 추이를 검토하여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할 것을 합의
- '04.8.13 :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요금인하 최종 합의

□ 조정 결과

- 이동전화요금 기본료 월 1,000원 인하($\Delta 3.7\%$ 인하)
- LM(시내전화→휴대폰) 통화요금 0.33원/분 인하(2.2% 인하)

33.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기구 부처별 설립

□ 과제 개요

-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를 부처별로 별도 설치·운영할 것인지 또는 단일기구로 통합 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부처 이견
- ※ 산자부에서 환경부가 추진중인 환경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 설립을 지양하고, KOLAS로 일원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04.5.19)

□ 이견 내용

- 산자부
 - 중앙부처별 별도의 국제공인인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 등 비효율을 초래
 - 기존 KOLAS제도 활용을 통해 해당분야 기술수준 제고가 가능하고, 국민 편의성 및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임
- 환경부·정통부
 - 해당분야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국제공인인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

□ 추진 경과

- '04.5월, 6월 : 국조실 산업심의관 주재 실무회의
- '04.9.14 : 국조실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회의에서 조정 완료

□ 조정 결과

-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시('05년),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정부 국가단일 인정기구 설치」 방안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인정기구 운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기로 함
- 신규방안 수립시 행자부·예산처 등의 의견을 적극 고려토록 하며 수립시까지 별도 인정기구 설립을 자제

34. 온라인게임 이중심의

□ 과제 개요

- 문광부가 ‘18세 이용가’로 사전 등급분류(’03.10)한 온라인 게임 (리니지2)에 대해 정통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 이용가)’로 사후심의(’04.5) 한 것과 관련하여 이중심의 논란 제기

<온라인게임 심의현황>

구 분	영상물등급위원회(문광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부)
심의근거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법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심의대상	모든 게임물(온라인게임, PC게임, 아케이드 게임)	온라인상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
심의방식	사전심의(유통시 의무신청)	사후심의(자체 모니터링)
심의내용	등급분류(전체, 12세, 15세, 18세)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19세)

□ 이견 내용

- 문광부 : 음비게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로 일원화
- 정통부 : 온라인게임의 특성 및 심의전문성 등을 고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방식 적절

□ 추진 경과

- ‘04.7.1, 7.23, 8.19 : 국조실 경제조정관실 주관으로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개최하여 심의기능 일원화를 전제로 한 조정안 협의
 - 관련법 개정전 양 기구의 협조를 통한 이중심의 문제 최소화
 - 온라인게임 심의제도에 관한 개선안 마련 등

- '04.8.24 : 국조실 주관으로 실무조정안에 대한 업계·협회·학계 설명회의 개최
- '04.9.2 : 국조실 주관 회의에서 조정 완료

□ 조정 결과

- 온라인게임 심의기능을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일원화
 - 다만,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소위원회는 문광부와 정통부에서 1/2씩 추천하여 새로 구성(9월)
 - 양 부처는 심의기능 일원화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등급분류기준, 사후관리 등)을 공동개선(9월)
- 온라인게임 심의와 관련하여 영등위와 정통위의 협조체계 구축
 - 영등위는 등급분류결과 등 심의정보를 정통위에 통보·공유하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영등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사후 모니터링 위주로 운용하되, 그 결과를 영등위에 통보
- 양 부처는 온라인게임 심의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조속 마련
 - 업계 자율심의제 도입('06.1월)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04년내 수립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05년 상반기)
 - 동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게임 심의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운영('04.9~)

35. 농어촌 펜션 제도개선 추진

□ 과제 개요

- 농어촌민박의 자율화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펜션의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
 - 농어촌 민박 제도개선 방안 검토(농림부)
 - 위생관리기준 및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 검토(복지부)
 - 관광펜션업(관광숙박업)의 신규 도입방안 검토(문광부)
 - 용도지역 제한행위 등 검토(건교부)
 -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등 검토(환경부)

□ 추진 경과

- '04.2월 강원도 평창지역 농어촌 민박시설 관리실태 등 점검(국무조정실) 후 「농어촌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04.4.3, 문광부·농림부·복지부·건교부·산림청)
 - 농어촌 민박요건 강화(거주요건 부과) 및 단속계획(7.1 부터) 발표
- '04.6.10~17 강원·충남·제주지역 펜션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국무조정실, 농림·복지·환경부, 지자체)을 실시하고 「농어촌 펜션 현황 및 개선방안」을 국무회의 보고(6.29)
 - 개선방안과 당초 7.1 부터의 단속계획 연기방침(법령 보완후)을 보고
- 국무회의 보고시 개선방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전국 전수조사(7.1~8.31) 실시 및 수차의 관계부처조정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안을 마련, 국무회의 보고('04.10.12)

□ 조정 결과

- 농어촌민박의 “지정제도” 도입 등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민박의 입지특례를 악용한 불법적 펜션의 난립을 제도적으로 차단(농어촌정비법개정안 국회제출, '04.11월)

36. 장기가동원전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 과제 개요

- 장기가동원전(고리, 월성원전)의 수명연장운전의 필요성을 사업자(한수원)측에서 제기
- 과기부·산자부에서 공론화 및 인·허가문제 등 관련 이견

□ 이견 내용

- 과기부 : 산자부에서 원전 연장운전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한 후 과기부는 기술기준 및 인허가제도 마련
- 산자부 : 연장운전방침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되, 과기부에서 기술기준 및 인·허가 제도를 우선 검토한 후 산자부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추진

□ 추진 경과

- 사업자(한수원)는 고리, 월성원전 수명연장운전의 필요성 제기
 - 지역주민반대 등으로 신규원전 부지 확보의 어려움
 - 설계수명 도래시점에서도 잔존자산가치가 크며, 기존설비의 재사용 가능
 - 원전(한국표준형) 신규건설보다 경제적(전력연구원, '02.7)
 - 예상 순이익 : 2,900억원(고리 1호기), 1,190억원(월성 1호기)
- ※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30년, '78~'08),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30년, '83~'13)
- '04.7.2 :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금년내 정부방침을 결정키로 합의

- 수명연장, 폐쇄조치 등 모든 가능대안을 중립적 입장에서 검토
- 기술적 안전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중장기 에너지정책,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해당기관별 조치계획을 마련
 - 과기부 : 기술기준, 인허가 제도 등 원자력관련 규정 개정방안
 - 산자부 : 원전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방안
 - 한수원(주) : 수명연장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
- '04.7.20 :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조정회의
 - 과기부입장 : 산자부에서 원전수명연장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 후 과기부에서 기술기준 및 인허가제도 마련 주장
 - 산자부입장 : 과기부에서 기술기준 및 인·허가 제도 우선 검토후 산자부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추진
- '04.7.28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

□ 조정 결과

- 원전수명연장의 필요성, 외국의 사례, 국내준비 현황, 원전 수명연장의 기술기준 및 인·허가제도 수립 등 향후계획을 보고
- 과기부는 법적 제도화, 산자부는 공론화 추진

37.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설립 관련

□ 과제 개요

-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설립과 관련하여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원자력의학원), 해당 지자체(부산시, 기장군)와 기획예산처 간의 이견 발생

* 원자력의학원 분원 개요 : 위치(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부근), 규모(부산 2만7천평, 300병상), 총사업비(기간) : 1525억원('04~'07)

-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04.08월)
 -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국고지원 곤란($B/C = 0.76$)
 -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정(1,453억원 → 1,012억원, 300병상 → 124병상) 병원건립(473억원)은 지자체와 의학원이 재원 부담

□ 이견 내용

- 과기부(원자력의학원), 지자체(기장군, 부산시) 입장
 - 병상규모는 300병상 이상이라야 경제적
 - 원자력의학원 재원 부담 불가
 - 부산시, 기장군은 부지매입비 포함 254억원 지원
- 기획예산처 입장
 - 병원건립은 의학원·지자체의 재원으로 추진
 - 병원건립시에만 연구센터와 비상진료센터를 국고지원

□ 추진 경과

- '04.8.24 : 국조실 주관 제1차 조정회의 개최
- '04.8.31 : 국조실 주관 제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완료

□ 조정 결과

-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은 원자력의학원이 주체가 되어 추진
(사업기간 : '04~'08년)
- 연구개발센터와 방사선 비상진료센터 건립은 국고(400억원 추정)
에서 지원하고, 병원건립은 원자력의학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
- 원자력병원의 규모는 300병상으로 함
- 병원건립비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기장군)의
부담비율은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구축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의 1/3로 정함

38. 오염물질의해안배출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과제 개요

- 육상기인 해양오염물질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동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해수부·환경부간 이견조정

<입법 추진 경위>

- 의원입법(안)(정장선의원 등 10명) 발의로 국회 농해위 회부('02. 8), 국회 주관 관계부처 협의('02. 9), 국회에서 수정안 마련('03.10)

※ 당초 「육상기인오염물질의해안배출관리법」에서 「오염물질의해안배출관리법」으로 명칭변경 및 부처간 이견해소를 위해 다수조항 삭제, 7장 43조를 3장 18조로 수정

- 의원입법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국무조정실 주관, '03.11.10)
 - 부처간 조율을 통해 정부입법으로 추진기로 결정

※ 동법(안)은 16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음

□ 이견 내용

- 해수부 : 기존 환경법제는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 제정 필요 주장
- 환경부 :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기존 환경법제와 중복 및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정 반대

□ 추진 경과

- 국조실 주관 조정회의 개최(4회/'03.8~12)
 -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정(안) 마련

- 해수부가 법률 수정(안)을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04. 3. 2)
 - 기존 의원입법(안)에서 간접해안배출 및 관련규정 삭제, 오염물질의 정의·해안배출 기준 수정 등
- 해수부의 수정(안)에 대한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수개단 주관, '04. 3. 9)
- 해수부 수정(안)에 대한 국조실 조정방안 마련('04. 3.23)
- 연안해역 오염실태 현장확인('04. 4.20~22) 및 결과보고('04. 5. 6)
- 법(안) 관련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수개단 주관, '04.6.17)하여 국조실 조정안 제시
 - 제1안 : 별도의 해안배출기준 마련시까지 법률제정 유보
 - 제2안 : 특별법(오염이 심한 지역에 한정) 제정
- ※ 한편,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 등은 오염물질의해안배출관리법(안) 의원입법 재발의, 농해위 회부('04.7)
- 관계장관 조정회의 개최(BH 주관, '04. 9.22)
 - BH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참석

□ 조정 결과

- 현 단계에서 신법 제정은 불필요
- 해수부가 해양환경관련 정책·예산·제도·법령(개정 등)·행정체제 등을 포함하는 종합실천계획을 수립·시행
 - * 국조실 중심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지원
-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현단계에서 신법제정은 불필요)을 국회에 전달

<후속조치>

-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마산만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04.12.29) 수립
- ※ 해수부는 「특별관리해역내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수행 중('04.12.~'05.6.)이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 중

39.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기간 단축

□ 과제 개요

- 이공계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기간 단축 문제(현행 4년→3년)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이견

□ 이견 내용

○ 재정부·과기부

-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인책으로서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
- 타 대체복무수단(산업기능 34개월, 공익근무 26개월)과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추가단축 필요

○ 교육부

-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후 4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는 것은 지속적인 능력발전에 장애
- 고급인력의 조기확보 등의 측면에서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

○ 산자부

- 대체복무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 분석과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

○ 국방부

- 병역자원의 부족과 兵 복무기간단축 등에 따른 현역자원 수급사정이 어려워 대체복무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연구요원만의 추가단축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곤란

* '03.9.3. 병역법 개정,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부기간을 조정(5년→4년)

- 향후, 산자부 주관 대체복무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 분석과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
- 산업체의 요구(장기복무)와 병역의무자의 요구(복무기간 단축)를 고려한 적정 복무기간 산출 필요

□ 추진 경과

- '04.2.17 : BH 주관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 제도의 성과분석 등을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합의 (3월~8월)
- 산자부 등 7개 부처·청 합동 T/F를 구성, 공동용역 실시
 - 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국방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04.8월 : 연구용역결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복무기간 단축 : 현행 4년 → 3년

□ 조정 결과

-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04.8.31, 국무회의)
- ⇒ 병역법개정안 국회 통과(12.31), '05.7.1 시행 예정

40. 공무원노조 허용

□ 과제 개요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 허용 입법 추진

□ 이견 내용

-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 관련 전국단위의 단일노조 허용 여부 등
 - 노동부 : 결사의 자유 원칙상 허용 불가피, 다만 교섭체계를 보완하여 공무원노조 허용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 법무·행자부 : 공무원노조 관리상의 어려움, 사회적 파급영향 등을 우려

□ 추진 경과

- '04.3.4 노동부 업무보고시 “부처간 협의를 조기 마무리, 17대 국회 개원 후에 법안 제출” 결정
 - 이후 수차의 관계부처 협의(4.20, 5.19, 5.20)를 통해 정부 입법안 마련을 추진
-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7.31, 10.2)를 통해 주요쟁점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조정, 「공무원노조법안」을 마련
 - 국무회의(10.19) → 국회제출(10.28) → 국회의결(12.29)

□ 조정 결과(정부 입법안 확정)

- 노조 조직형태는 각 헌법기관·각급 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토록 하고,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함
- 기타 노조명칭·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법령·예산관련 제외) 보장, 단체행동권 제외, 시행시기 1년 유예 등

41. 부산항 컨테이너세 존폐 문제

□ 과제 개요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현재 부산시에서 수출입화물 1TEU당 2만원씩 부과하고 있는 컨테이너세 폐지 관련 이견
- * 컨테이너세는 지역개발세의 일종으로 항만 배후도로 건설재원으로 활용

□ 이견/갈등 내용

- 부산시 : 컨테이너세 폐지를 위해서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함
- 예산처 : 항만배후도로 건설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에서 지원 곤란

□ 추진경과

- '03.7월 부산항 물류개선위원회 컨테이너세 폐지 건의
- '03.8월 청와대 물류관계관 회의시 건의
- '03.10월 부산항 활성화 관계기관 대책 회의시 부산시에 건의
- '03.11월 당·정 협의시 건의
- '04.3월 국가물류개선대책(재경부)에 관련내용 반영을 추진 하였으나 부산시 반대로 미반영
- '04.4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 개최
- '04. 7~9월 정부업무 조정과제 종결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 조정결과 : 2007년부터 컨테이너세 폐지

42. 해안가 산재 FRP조선소 집단이주 관련

□ 과제 개요

- 여수시에서는 돌산읍 일대의 조선소를 여수산업단지에 집단이주코자 하나, 동 지역은 위험물 운송선박이 주로 항행하는 위치로서 항만 안전을 위해서는 이전이 곤란

□ 이견 내용

- 해수부 : 이주 위치가 위험물 운송선박 항로에 인접하여 선박안전에 위협 초래
- 여수시 : 환경오염 피해를 문제로 돌산읍 일대의 FRP조선소 24개 업체를 여수산업 확장단지로 이주 추진

□ 추진 경과

- '01.11월 조선소 집단화 이주계획 통보(여수시→여수지방해양수산청)
- '01.12월~03.12월 관계기관, 조선업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10여차례 개최
- '04.2.18 조선소 이주대책 간담회 개최(여수시청)

□ 조정 결과

- 여수시에서 이주 계획 철회
 - * '04.10.18 여수시에서 조선소 집단화 이주계획 철회 통보

43. 국립묘지 관리 개선방안

□ 과제 개요

- '03.12.16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총리실 주관하에 그동안의 시대변화를 고려하여 안장기준과 적용범위, 국립묘지 관할부처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지시

□ 이견 내용

○ 안장대상 관련

- 관련 단체별로 국립묘지 안장이 배제되는 현행 국립묘지령 관련조항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
- * '97. 1. 확대시행일전 사망 무공수훈자의 이전 안장 요구(무공수훈자 미안장 유족회),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에 대한 안장 제한 기준 완화 요구(상이군경회) 등

○ 화장 · 안장기간제한 · 시설기준 통일 등 관련

- 시신안장 대상자들은 화장원칙과 묘지면적축소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 안장대상자를 중심으로 화장원칙 및 안장기간 제한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부정적 견해

○ 국립묘지 관할권 문제

- 국가보훈처에서는 묘역 안장자 및 유가족 대부분이 보훈대상자이고 현행 국립묘지가 수행하는 기능은 보훈기능과 일치하며, 경비인력은 아웃소싱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국가보훈처로 국립묘지관리권 일원화를 주장한 반면
- 국방부에서는 관리체계(국방부에서 국립현충원 관리)를 변경할 구체적 실익이 없다며 현행관리체계 유지 주장

□ 추진 경과

- 민관합동의 국립묘지발전위원회 구성('03.12)
- 10차례 위원회를 거쳐 대정부 건의안(국립묘지발전방안) 마련('04.1~5.28)
 - 안장대상, 안장절차, 안장방법 및 시설기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 국립묘지발전방안 공청회 개최('04. 5. 21),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대정부건의안을 토대로 정부안 마련
 - 관계차관회의(7.22), 관계장관회의(9.22), 국무회의 보고(11.30)

□ 조정 결과

- 안장대상자의 합리적 조정
 - 엄격한 요건하에 의사상자·자발적 참전동포 등을 추가
 - 일정범죄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라도 심사를 거쳐 국가에 대한 공적이 월등하다면 안장이 가능토록 함
 - 무공수훈자에 대한 안장 확대시행일('97.1월)전 사망한 무공수훈자의 이전 안장 허용
- 화장원칙 및 안장기간 제한 제도 도입
 - 화장원칙, 생전신분에 따른 시설기준 차별 철폐, 안장기간 제한 등
- 국방부와 보훈처간 관할권 문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논의·결정 등

44.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 과제 개요

- '03.7.25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입법 관련 논의를 종결하고 논의결과를 정부로 이송함에 따라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관계부처 이견을 조정

□ 이견 내용

- 노동부
 - 연내('04년) 입법추진,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 마련, 불이행시 과태료 3천만원, 공표 등 제재)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이후 해고제한), 상용형 파견에 한해 파견대상 확대, 파견기간 현행(2년) 유지, 휴지기간 설정(종전파견기간의 1/3), 고용의제규정을 불법파견시에도 확대적용
- 재경부
 - 입법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포함하여 추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4년(이후 해고제한), 등록모집형까지 파견대상 확대, 파견기간 최장 4년으로 확대
- 산자부
 - 입법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포함하여 추진, 차별시정절차 삭제(선언적으로 차별금지규정, 근로감독을 통해 지도), 근로계약기간 3년으로 확대(이후 해고제한 반대), 등록모집형까지 파견대상 확대(제조업도 포함), 파견기간 최장 4년, 휴지기간 설정 반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반대
- 법무부
 - 기간제 사용기간 초과시 해고제한 방식을 정규직 의제방식 대신 계약갱신 거부방식으로 규정, 차별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공표제도 삭제, 불리한 처우금지규정의 구성요건을 명확화

○ 건교부

- 물류업무(항만하역, 운수업 등 현행 금지업무는 제외)에 대해서도 파견근로 확대

□ 추진 경과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개최('04.3.10)
 - 노동·재경·산자·법무부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쟁점조율기로 함(재정부 총괄)
- '04.3.15 입법추진 관련 실무회의, '04.4.12 재정부 주관 워크숍 개최(재경·산자·법무·노동부, 노동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
-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04.4.20)
 - 이후 조정은 노동부에서 총괄하기로 결정
-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 논의('04.5.7)
 - 정부안을 조속한 시일내 확정기로 함(입법추진 여부는 추후 검토)
- 5.8, 5.19 노동부 주관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 7.20, 8.17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이견조정
- 9.8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안 확정

□ 조정 결과

- 연내 입법추진(2006년 시행, 300인미만은 2007년)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2년→3년, 이후 해고제한)
- 파견대상 확대(등록·모집형 포함), 파견기간 연장(최장 2년→최장 3년)
- 휴지기간 조정(종전파견기간의 1/3 → 3년사용후 3개월)
-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불법파견 포함)로 전환(위반시 과태료)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상한을 상향(3천만원→1억원)하고 공표제도 폐지

45.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일원화

□ 과제 개요

-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규정이 충돌
 - 주택법(건교부) : 시설종류에 따라 1-10년으로 차등규정
 - 집합건물법(법무부) : 무조건 10년으로 규정
- 업계에서는 그간 주택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대법원이 법리상 집합건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04.4.9)
 - 이로 인해, 최근 10년내에 건축한 아파트의 집단소송과 향후 분양가 상승 등 건축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
-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건교부와 법무부간에 이견이 있어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조정 추진

□ 이견 내용

- 건설교통부 : 주택법으로 일원화, 양 법 동시개정
 -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관련규정을 동시에 개정하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 법무부 : 현행 유지, 필요시 주택법에 특칙규정 삽입
 - 현행 집합건물법 규정이 타당함. 다만, 정책적으로 아파트에 대해 책임기간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으나,
 - 그 방법은 주택법에서 아파트에 대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다시 배제하는 특칙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추진

□ 추진 경과

○ '04.4.9 : 대법원 판결

※ 아파트에 대해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함

○ '04.8.15 : 주택협회, 국무조정실에 시정조치 및 조정 건의

○ '04.5~10월 : 부처 실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자문
- 건교부 및 법무부 실무담당자 회의 및 협의조정

○ '04.11.11 :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조정 결과

○ 주택법으로 일원화

- 우선, 주택법을 먼저 개정하여 공동주택에 대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넣어 시행
- 다만,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같은 내용에 대해 상호간에 배제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추후 집합건물법을 개정할 때 상호 충돌되는 부분을 조정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현실화

- 현행 시설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설정된지 20여년이 경과되는 등 입주자의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므로
- 건교부가 현행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정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함

46. 자연문화유산등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 과제 개요

- 민간차원의 국민신탁 제도마련에 대해 법제정 추진방식 및 법안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04.5~6, 환경부)
 - 주관부처(환경부), 범명칭(자연·문화유산 등에 관한 국민신탁법), 공동입법 및 단일법인 설립 등에 대해 실무 합의
- ※ 환경부에서 국민신탁운동의 국·내외 사례 등에 관한 기초연구('02.7) 및 국민신탁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사업 추진('03.8~'04.2)
- 문광부(문화재청)는 동법에서 문화유산의 비중이 큰 것을 이유로 주관부처 이관을 요구하고, 조정을 신청('04.9)
 - 범명칭을 수정하고 복수법인을 설립하여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각각 지도·감독

□ 이견 내용

- 환경부 : 기 협의('04.5)한 내용에 따라 환경부가 주관하여 공동 입법을 추진하고 국민신탁 단일법인을 설립
- 문화부 : 주관부처를 문화부로 하여 입법을 추진하며 범명칭은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으로 수정하고, 국민신탁 복수법인을 설립

□ 추진 경과

- 문광부·환경부·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견조정 1차 회의 개최(환경심의관 주재, '04.10.1)
 - 동법안에 문화유산비중이 크므로 주관부처 이관 필요(문광부)

- 환경부가 주관하여 입법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접근된 사안
이므로 환경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것이 타당(환경부)
- 양 부처간 입장차이 및 전문가간 시각차가 커서 부처 의견
재정리한 후 2차 회의를 개최기로 함
- 외국사례 조사 등 2차 조정회의 준비중 문광부 차관실에서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양 부처 의견을 수렴('04.10.16)
 - 국민신탁 복수법인을 설립하기로 함
 - 동법 제정은 공동입법으로 추진하되 주관부처는 11월초 장관
회의에서 결정
 - 법령명은 비주관부처의 의견을 따르기로 함
- 문화재청장이 차관회의 결과를 문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최종
합의도출('04.10.25)
 - 동법 제정은 환경부가 주관

□ 조정 결과

- 법 제정은 환경부가 주관하나 환경부·문화재청 공동입법으로 함
- 법령명은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으로 함
- 복수법인(문화유산 법인, 자연자산 법인 등) 허용

47.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 과제 개요

- 환경부는 대도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00년부터 노후 시내버스를 매연이 적은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중
- 천연가스 시내버스 확대에 필수적인 시내버스 차고지내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가 학교보건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입지규제로 추진에 애로가 있어 조정 요청

□ 이견 내용

○ 환경부

- 학교보건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충전소 입지제한 규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법) 수준으로 완화 요구
 -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는 금지하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설치 가능(학교보건법)
 - *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m이내에는 공동주택 입지 불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사업소경계까지 10m이상(방호벽 설치시 5m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30m이내에 학교, 주택, 병원 등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방호벽 설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천연가스의 안전성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완화 필요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규정 완화시 어린이들의 안전성 저해 우려 및 이에 따른 사회단체 및 학부모 민원제기를 이유로 완화반대
- 현재 입지를 금지하고 있는 다른 고압가스시설(LPG, 산소, 아세틸렌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완화곤란 등

○ 건설교통부

- 공동주택 주변에 위험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입주민 반발 우려 등

□ 추진 경과

- 관계기관 조정회의(2회 : '04. 10.7, 10.25, 환경심의관 주재)
 - 교육부 · 환경부 · 건교부 · 소방청 · 고충처리위 담당과장, 가스공사 · 가스안전공사 전문가 참석
- 이중규제여부 검토회의('04.10.18, 환경심의관 주재)
 - 규제개혁심의관실 재경산자과장, 일반행정과장 참석
 - 결과 : 고압가스법은 고압가스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며, 학교보건법 등 “고압가스법”보다 엄격한 안전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은 특별법 성격이므로 이중규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정 결과

-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시 신속히 확산되는 등 폭발가능성이 적어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기존 시내버스 차고지내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설치를 허용
 - 학교보건법 개정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버스차고지내에 천연가스충전소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포함시켜 입법 예고절차를 통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추진
 -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천연가스충전소 설치허용 여부를 심의할 때 천연가스충전소의 필요성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한 기존 행정심판재결서 및 행정소송판결문을 참고하도록 조치
 - ※ 충전소 설치사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불허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재결서 및 판결문 참고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은 건교부의 유권해석으로 허용
 - ※ 기존 차고지내에 자사버스 충전만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천연가스 충전소는 차고지의 부속용도로 보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입지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48. 한탄강댐 건설

□ 과제 개요

- 임진강 대홍수('96, '98, '99)를 계기로 한탄강댐을 건설키로 정부 방침을 확정('99.12)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지역환경단체와 이견

□ 이견 내용

- 건설교통부 : 일정대로 댐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 연천·포천 주민 : 댐건설에 찬성
- 상류 철원지역 주민 등 : 환경피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홍수 피해가중 등을 우려하며 댐건설에 반대

□ 추진 경과

- 대통령지시('03.12)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정부, 환경 단체, 찬·반 주민대표간 수차례 갈등조정회의 개최
 - 16차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04.8.27)

□ 조정 결과

- '04.11.2일 지속가능발전위 조정소위는 기존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저류지(2곳) 및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키로 확정
 - 정부·전문가·환경단체·주민대표 등으로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1년 이내에 관련절차 완료 추진

49. 주한미군 재배치

□ 과제 개요

- 용산기지 이전
 - 서울도심에 산재한 주한미군 9개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
 - 이전비용은 이전을 요청한 韓측에서 부담
- 미2사단 재배치
 - 1단계로 동두천·의정부 기존기지로 통합하고, 2단계는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되 이전 시기는 정치·경제·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
-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2011년 까지 통폐합

⇒ 평택지역(서탄·팽성)에 부지 349만평 매입 필요

□ 이견내용

- 토지소유자, 임차인 등 이전지역 주민은 생활기반을 상실함으로써 인한 불안감이 조성되어 이전에 반대하고 토지매수 불응
- 일부 시민단체는 반전·반미정서 등을 이유로 미군기지 이전 반대
- 평택시민의 경우 미군부대 주둔으로 생활환경 파괴, 범죄 등 우려와 함께 평화신도시·평택항 배후도시·고속철역사 건립, 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심리가 병존
- 평택상인연합회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며 미군기지 이전을 찬성하는 입장

□ 추진경과

- 평택지역 국회의원(정장선, 우제항) 대상 설명회('04.6.5, 8.23, 11.4), 당정협의(8.10, 8.23, 11.16, 11.30) 등을 통해 이전협정, 특별법 등 지역개발계획 및 이주민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 요청
 - 평택시장·시의회의원 대상 설명회·간담회도 수시개최
- 이전지역 주민(팽성·서탄)들을 수시 방문하여 정부의 미군기지 이전 방침과 이주민을 위한 지원대책 등에 대한 설명회·간담회 지속 개최(주민반대대책위와도 물밑대화를 계속 실시)
- 평통사 등 반미성향의 시민단체 등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전 협상의 배경과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 요청('04.3.30, 4.14)
- 주한미군 관련 전문가(정부, 학계, 연구소, 언론계 등) 워크숍을 개최, 주한미군 주둔의 의의 등 국가안보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04.5.28, 11.5)하고 이전사업에 대한 이해 확산
- 주요일간지, 방송3사 등을 대상으로 중립적·객관적 보도를 위해 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하고 특히 지방지에 대해 집중홍보

□ 조정결과

- 용산기지 이전협정(UA) 및 LPP수정안에 대한 국회비준동의('04.12)를 통해 이전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
- 평택지원특별법 제정('04.12)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이전지역 개발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 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이전지역 발전대책,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회·간담회 등 주민 설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 '주한미군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현안사항에 즉시 대응하여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 주한미군 이전사업의 국민적 이해제고를 위한 홍보추진 및 특별법 등 주민지원대책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 강화를 통해 우호적 사업 분위기 조성

50. 퇴직연금제도 도입

□ 과제 개요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및 법정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퇴직금 제도의 개선대안으로 퇴직연금제 도입과 적용확대 추진
 - 퇴직금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 도입(노동부안)
 - 4인이하 사업장 및 1년미만 단기근속 근로자 적용 확대
 - 개별 사업장별 연금전환 여부는 노사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연금 제도 선택 유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허용)
 -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도록 통산장치 마련
 - 적립금 운용방법 제한, 금융기관 요건설정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

□ 이견 내용

- 산자부·재경부 : 퇴직연금의 적용확대 반대
- 노동계 : 전 사업장 적용확대, 확정급여형만 도입 등
- 경영계 : 적용확대 반대, 확정기여형 도입, 퇴직연금의 도입과 국민연금의 연계(사업주의 부담완화) 등

□ 추진 경과

- '01.7월부터 노사정위에서 퇴직연금제 도입 관련 논의
 - 기초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노사정간 공감대 확산 및 의견조율 노력
- '03.3월 이후 상무위 간사회회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접근을 시도(합의 실패)

- 03.7.25 노사정위는 논의결과를 정부(노동부)에 이송
 - 노사입장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03.9.8~18) 및 입법예고('03.9.24~10.14)
 - 관계부처 및 단체와 이견 지속 조정
 - '04.4.27 관계부처 회의 개최(재경부, 예산처, 복지부, 산자부)
 - '04.7.13 1급 관계관 회의를 통해 이견조정 실시
- '04.7.20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견조정 완료

□ 조정 결과

- 적용확대 문제(4인 이하 사업장, 1년 미만 근속자)
 - 4인 이하 사업장만 적용 확대하되,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
-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문제
 - 국민연금과 별도로 도입함

51.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관련

□ 과제 개요

- '03년 재정계산 결과, 현행 제도는 장기 지속이 어려운 재정구조
 - 내는 것의 2배 이상을 받는 현행 구조로는 '47년 연금기금 고갈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현재의 급여수준을 위해서는 향후 보험료를 30~40%까지 인상 필요(세대간 형평성 문제)
- 장기 지속가능한 구조로의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연금법개정안 마련
 -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70년까지 장기재정을 안정화
 - ※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9%까지 인상(2010년~2030년)
 - ※ 현행 60%인 급여수준을 50%수준으로 조정('05~'07년은 55%)

□ 이견 내용

- 보험료 인상, 급여수준 인하 등 장기 재정안정화 대책과 기금 관리체계개편에 대한 입장 대립
- 국회 및 노사의 입장
 - 열린우리당 : 정부안과 같이 급여수준은 인하하되, 보험료 인상은 차기 재정계산때 논의
 - 한나라당 : 기초연금제 실시, 상임위 수정안 중 급여제도 개선부분만 처리, 급여수준 및 Governance는 별도논의 주장
 - 민노당, 민주당 : 현행 유지 또는 기초연금제 도입검토 주장
 - 노동·시민단체 : 급여수준 60% 유지, '08년으로 개혁 연기 등을 주장('08년은 차기 재정계산 시행년도)
 - 경영계 : 보험료율 인상 반대 및 급여수준 40%인하

□ 추진 경과 및 결과

- 지난 16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구체적 심의없이 자동폐기 되었으나, 정부에서 시급히 재입법이 필요한 민생개혁법안으로 결정하여 제17대 국회에 다시 제출('04.6.2)
- 국민연금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열린우리당(6.7), 한나라당(6.9), 민주노동당(6.17)
 - 국민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6.11)
 -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정책설명회(8.12)
 - 열린우리당 보좌진 설명회(6.17. 9.10)
 - 국민연금관련 당·정 간담회(8.1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안 공청회(11.4)
- 국민연금법안 상임위 상정(11.26)

* 정부내 이견은 정리되었으나, 여야 및 노사간 입장차이는 계속 상존

52. 에너지 기본법 관련

□ 과제 개요

- 산자부에서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자 환경부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반대

□ 이견 내용

-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간사 선정
 - 환경부 :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산자부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 산자부 : 산자부 장관이 간사직 수임
- 우선적인 에너지 공급원 관련
 - 환경부 : 신재생 에너지
 - 산자부 : 석유·가스

□ 추진 경과

- '04.11월 : 재경부 주관 실무선 협의를 통해 이견 조정

□ 조정 결과

- 국가에너지위원회 공동간사 관련
 - 산자부장관과 민간위원 1인(환경부장관이 추천)이 공동간사
- 우선적인 에너지 공급원 관련
 - 산자부案과 같이 “석유·가스”를 우선적 에너지 공급원으로 명시하되
 - 다른 항에 “신재생에너지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라는 문구를 삽입

53. ITA법 제정 추진

□ 과제 개요

- 정통부가 공공부문의 정보화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ITA도입 제도화 방안 마련·추진

※ 정보기술아키텍처(ITA,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정보기술자원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업무와 정보,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

□ 이견 내용

- 정통부
 - 전자정부 31대과제의 하나로 ITA 입법방침(정통부 주관)을 대통령 보고('03.10)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을 위한 ITA입법 추진
- 행자부
 - ITA는 전자정부의 핵심사항으로 정보자원관리기능과 중복
 - 정통부 법안은 ITA의 5개분야중 정보기술적용지침(TRM)에 한정, 타 분야에 대하여는 현행 전자정부법 개정·반영 타당

□ 추진 경과

- 실무협의('04.11.5) 및 외부전문가 등 의견청취('04.11.10)
- 국조실 주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완료('04.11.25)

□ 조정 결과

- 정통부는 ITA 도입·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 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와 공동 추진

54. 철도청 경영개선 대책 추진

□ 과제 개요

- 철도공사 전환('05.1)에 따라 고속철도부채상환 부담 등으로 경영적자 우려

□ 이견 내용

- 철도청의 ①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35%→60%)요구, ②매입부가세 환급(2000억) 및 매출부가세 면제(600억) 요구, ③정부대전청사 무상사용('07년까지)요구에 대해 각각
 - ① 기예처는 타 SOC 사업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로 곤란
 - ② 재경부는 충분히 세제지원 중으로 더 이상 지원 불가
 - ③ 행자부는 비영리 공익사업만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

□ 추진 경과 및 조정결과

- 철도청의 공사 전환('05.1) 초기 과도한 적자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지원에 대한 이견조정 추진('04.8.18, 10.6)
 - 농어촌 특별세(678억원) 면제, 매입부가세(2,000억원) 환급, 국고지원 확대(예산 1천억 지원, 재특융자 3천억 추가) 합의
- * 국정현안정책조정 실무회의('04.10.25),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기관 회의('04.11.9) 개최
- '04.12.6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정 완료
 - 정부대전청사의 철도(청) 공동보유지분을 감안하여 공사 사옥건립시까지 사용토록 조치
 - '98년 대전청사 입주시 철도청이 지급한 171억원의 지분과 청사 임대료(연 100억원)를 상계하는 협약 체결 방안 추진
- * 경제조정관(주재), 행자부·건교부·철도청 담당국장

55. 통신·방송 융합 관련 협의·조정기능 강화

□ 과제 개요

- 위성·지상파 DMB 및 인터넷 TV 등 새로운 통·방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으로 추진 지연

□ 이견 내용

- 정통부·산자부 : 위성DMB사업의 조기정착, 이용자들의 요구 충족과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재전송 허용 필요
- 방송위 : 지상파 재송신 허용시 방송권역 파괴로 지역방송 고사 등을 우려, 지상파 재전송 반대

□ 추진 경과

- DMB 조기 도입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10.7, 10.15) 개최
 - 통신·방송·문화콘텐츠 관련 부처간 정책협의기능 강화방안으로 정통부, 방송위가 참여하는 「멀티미디어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 조정 결과

-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위원장:경제조정관)」를 구성하여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 (11.29, 제1차 회의 개최)
- 주요 정책에 대한 부처간 이견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또는 국조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에서 조정 추진

56.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법 제정 추진

□ 과제 개요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증대
 - 정부(산자부)와 여당의원(산자위) 중심으로 법제정을 추진 중이나, 과기부에서 법률소관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 이견 내용

- 과기부 : 부총리인 과기부장관이 총괄하는 것이 타당
- 산자부 : 주로 산업기술이 대상이므로 산자부 소관이 타당
- 정통부 : IT기술이 많으므로 정통부도 간사부처로 참여

□ 추진 경과

- 「기술유출 방지대책」(산자부) 경제장관간담회 보고(9.18)
- 「기술유출방지법」(산자부) 입법 예고(10.7~26)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의원(이광재 의원)입법(안) 제출(11.9)
 - ※ 관계부처는 독자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의원입법(안)에 최대한 협조기로 함

□ 조정 결과

- 당정간담회(11.26) 등에서 부처간 쟁점이 합의되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종결 처리
- 의원입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57. 판교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이견조율

□ 과제 개요

- '01.12월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택지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시 인구밀도 64인/ha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나
 - '03.8월 건교부 주도로 인구밀도를 96인/ha으로 늘리기로 당정 협의가 이루어져 인구밀도에 대해 건교·환경부간 이견 발생

□ 이견 내용

- '04.5월 건교부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환경부는 변경된 인구밀도(96인/ha)에 대해 협의를 유보

□ 추진 경과

- 판교신도시 개발 지연에 따른 입주일정 등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 국무조정실 주관 1급회의('04.11.12, 11.23) 및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회의('04.12.1)를 개최

□ 조정 결과

- 인구밀도 85인/ha 수준에서 건교·환경부 합의 도출
 - 건교부는 판교를 환경모범도시로 조성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개선 및 수도권 택지개발에 대한 건교·환경부, 환경단체, 전문가 공동조사단 구성(1년간)을 추진
- 양 부처는 판교신도시의 주택사업승인(임대주택 등)이 금년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

5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변경관련

□ 과제개요

- 환경부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서 수송용 경유로 전환하려고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재정부, 산자부, 건교부등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의견조정 필요

□ 이견내용

○ 환경부

- 수도권특별법의 투자재원 확보(10년간 6조원)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전환 필요

- 현행 부과수준(30원/ℓ)으로 부과시 1,600억원 추가징수* 가능

* 징수비용 절약(430억원), 징수율 제고(80→100%, +1,160억원)

○ 재정부 · 산자부 · 건교부 · 기획예산처

- 경유가격에 부담금을 전가하여 정유사 등으로부터 징수시 경유가격이 인상되므로

- 경유를 사용하는 산업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운수업계(버스·화물차)는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추가지급 요구 예상

☞ 결과적으로 보조금 추가지급시 원인자부담 효과도 없어지고 세수감소만 초래

※ 100% 보조금으로 지급시 연간 세수감소(△1,800억원)가 환경부가 전망한 추가 징수금액(1,600억원)을 상회

□ 추진 경과

- '03.11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개정법률안(오세훈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 재경부 : 원인자 부담원칙에 동의하나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상의 상대가격비가 유지되어야 함
- '04.5.7 환경부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전환방안을 보고하였으나 재경부·산자부·건교부 등 반대
- '04.5.14 석유류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재논의하였으나 상대가격비 변동 및 보조금 추가소요 등의 이유로 재경부·산자부·건교부 등 반대

□ 조정 결과

- '05년 에너지세제개편 이후에 협의할 사안이고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므로 일단 완료처리하고 내년 협의시 등록여부 검토기로 결정 (제29차 주무간사회회의시)
- '05년 상반기중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입법 완료 후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협의 재개

59. 인천공항 제2연륙교 주경간 폭 조정

□ 과제 개요

- 인천공항의 접근교통수단,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자유치의 핵심 SOC로서 2008년 완공이 필요
- 정부부처간 이견은 해소되었으나,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주경간 폭 확장을 요구하여 사업추진 지연

□ 이견 내용

- 인천공항 제2연륙교 주경간 폭 관련
 - 정부(재경부·건교부·해수부 등) : 700m(04.9.17 관계부처장관회의)
 - 인천 항만관련단체 등 : 1,000m

□ 추진경과

- 10.12일 총리주재 당정간담회 개최
 - 인천시 주관으로 적정 주경간 폭 산정을 위한 용역 시행
- 12.10일 인천시가 적정 주경간 폭을 정부에 건의
- 12.12일 관련부처, 국회의원 등이 참가하는 간담회 개최
- 12.17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최종방침 결정

□ 조정 결과

- 제2연륙교 주경간 폭을 800m로 확정
- 주경간 폭 확대에 추가되는 비용(1,106억원 추정)은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각각 50%씩 부담
-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천시의 적극협력 필요

60.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관련

□ 과제 개요

- ‘86년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임시저장시설은 ‘08년 포화예상)의 부지선정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추진 곤란

□ 추진 경과

○ 과거의 부지확보 추진경위

- ‘86년 이후 10년간 5회에 걸친 부지확보 노력 실패
 - 영덕·영일·울진(‘86~’89), 안면도(‘90), 장안·울진(‘93~’94), 굴업도(‘94~’95) 등에서 추진하였으나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

* 과기처 → 산자부로 관련 업무 이관(‘97.1)

- 임해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공모 시행(‘00.6~’01.6)
 - 영광, 고창 등 7개 지역에서 유치활동 전개되었으나 미신청
-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전환, 전문기관의 연구(‘01.12~’02.12)를 통해 후보부지 선정·발표(‘03.2.4)

* 전북 고창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영덕군 등 4개 지역

○ ‘03년 이후 부지선정 경위

- 사업자 주도방식에서 “지자체 자율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연계하여 부지선정 공고(‘03.5월)
 - 부안군수가 유치 신청,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부안군 위도를 후보부지로 선정(‘03.7월)

- 부안군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투쟁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 부지선정 절차 보완방침 발표('03.12월)
- 주민 유치청원, 주민투표 등을 포함하는 신규 공고를 발표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 추진('04.2월)
- 정부는 갈등 최소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에너지 민관합동포럼」 등을 통해 시민환경단체와 대화 노력 병행
 - 공론화기구 구성, 부안문제 해결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4개 원전지역 순회조사 등 지역 찬반의견 수렴
- 7개 시·군(10개 지역)에서 주민 유치청원 제출(5.31)
 - * 경북 울진(3개면), 전북 고창, 군산(2개면), 전남 영광, 전남 완도, 전남 장흥, 인천 강화
- 지역내 갈등 증폭을 우려한 지자체장들이 예비신청 포기(9.15)
- '04.12.17 : 원자력위원회에서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의결

□ 조정 결과

- 중·저준위는 사용후연료와 분리하여 부지선정을 우선 추진하되, 동 부지에 사용후연료 관리시설은 건설하지 아니함
- 사용후연료는 국가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
- 시민단체 등과 협의 및 각계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부지선정 추진

6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 과제 개요

-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 (의원입법, '03.12.31)
 - ※ “폐기물관리법”에서 건설폐기물 관련 부문을 분리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제정
- '05.1.1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중에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공사규모에 대하여 환경부와 건교부간 이견이 있어 환경부에서 조정 신청

□ 이견 내용

- 환경부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공사규모는 기존 폐기물관리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 발생량 5톤 이상의 건설공사로 유지
- 건설교통부
 -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발생량 1만톤이상, 기타 건설폐기물 발생량 1천톤이상의 건설공사로 분리발주대상 공사규모 완화를 요구

□ 추진 경과

- 환경부·건교부 실무조정회의 개최('04.11.22, 환경심의관주재)
 - 환경부는 50톤이상으로 양보안을 제시하였으나, 건교부는 기존입장(1만톤) 고수하는 등 양 부처 주장이 크게 차이가 나 실무선에서 합의도출 곤란

- 사회수석조정관 주재 차관급 조정회의 개최('04.12.21)
 - 환경부 차관, 건교부 차관보, 조달청 시설국장, 법제처 법제심의관, 연세대 한승헌 교수 등 참석

□ 조정 결과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하여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제정한 입법취지를 존중하되, 분리발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원활한 공사진행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결정
 - '05.1.1부터 500톤이상으로 하되 2년후 100톤이상으로 확대
 - ※ 2년 동안 시행성과 분석, 계약제도 개선으로 추가 확대여부 검토
 - ※ 동 법률은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조정결과에 대해 국회(환노위, 건교위)에 사전 설명(환경부 주관)
- 분리발주 규모변경(5톤이상→500톤이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추진
 - 폐기물처리지연으로 인한 본공사 지연시 건설업체 면책 등 공사현장의 지휘체계 보완(건교부)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지연 방지 대책(환경부)
 - 다수 소량발생 사업장을 통합한 분리발주 방법, 다년도 계속 사업에 대한 일괄계약 등 계약제도 개선 검토(조달청)
 - 분리발주로 인한 발주청, 입찰참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 검토(건교부)
 - 분리발주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국조실 주관 관계부처합동)

6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 과제 개요

- '99.10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음에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며, 개인의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20년 경과시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실효하게 하는 일몰제가 도입
- 이와 관련 지자체는 매수청구토지의 매입자금 및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한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이 절실
- '02.10 차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후 조정토록 결정

□ 이견 내용

- 건교부 : 도시계획시설의 존치(폐지) 기준 수립, 법령 개정, 국가지원, 지자체의 자구노력 등 필요
- 행자부(지자체)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국유지 무상양여 필요
- 재정경제부 : 지자체에 대한 국유지 무상양여 불가
- 기획예산처 :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불가

□ 추진 경과

- '97. 4 : 박영식의 17인 헌법소원 제기
- '99.10 : 헌법불합치 결정
- '02.1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정으로 내용승계
- '02.1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침시달(행자부)
- '02.12 : 국무조정실 주관 차관회의 개최
 -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03 상반기까지 정부차원대책 수립
- '03. 3~'04.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회의(10회)
- '04. 12.3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및 합의완료

□ 조정 결과

- 건설교통부 : 도시계획시설별 해제기준 및 개선방안 수립 등 합의
- 행정자치부 : 지자체 대지보상특별회계 의무설치 및 순세계 잉여금 적립
- 재정경제부 : 지방채 인수 및 국유지 일부 무상양여
- 기획예산처 : '06~'19년까지 매년 400억원(총 5,600억원)을 지자체가 원하는 균특회계사업에 배정

Ⅱ . 2004년도 조정실적

2. 조정을 진행중인 과제(4건)

1. 식용견 위생관리 관련

□ 과제 개요

- 식용견이 비위생적이고 혐오스럽게 도축 및 유통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도개선 추진

□ 이견 내용

- 농림부
 - 국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과 국가 이미지 추락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위생·환경 관련 법령으로 간접 규제하자는 입장
- 복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농림부 소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키고,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용견과 애완견을 구분하여 식용견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
- 환경부
 - 환경 관련 법령으로 간접 규제하는 것은 위생관리의 대안이 아니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식육가능 가축으로 규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입장
- 동물보호단체
 - 국제적 비난, 식용견 산업의 대규모화 초래 우려, 동물보호 차원에서 개 식용의 전면 금지 요구
- 일부 개식용 관련업계
 - 원칙적으로 합법화 요구, 차선으로 개도축장을 폐수배출시설로 신고 가능하도록 요구

□ 추진 경과

-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연구용역 실시 및 의견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3차례의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04.7,8,9월)
- 식용견 도축시설, 판매업소 등 현장실태 확인('04.10.14~15)
- 국정홍보처 의뢰 여론조사 실시('04.10.22~23)
 - * 식용견 문화에 대한 의견 : 찬성(89.5%), 반대(9.9%)
 - 식용견을 먹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84.7%가 식용견 문화에 찬성
- 연구용역 실시('04.11.6~'05.1.6 한국정책학회)

□ 향후 조정계획

-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조정 완료 예정

2. 자활사업 참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 과제 개요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적용제외 요청
 - ※ 강기정의원이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위한 고용보험법 중개정법률안을 노동부에 검토 요청('04.9월)

□ 이견 내용

- 자활사업 참여 기초수급자의 근로자성 여부
 - 노동부는 자활사업 참여자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달리 볼 여지가 없다는 입장
 - 복지부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로서,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자활급여는 공공부조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어 통상의 임금과는 차이가 있음
- 고용보험 가입의 실효성 여부
 - 노동부는 1인가구인 경우 실업급여는 생계급여를 초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실업지원 가능 주장
 - 복지부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는 실직의 가능성이 없고,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고,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등은 자활급여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음

□ 추진 경과

- 복지부, 기초수급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 관련 조정 요청('04.12월)
-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04.12.21) 개최

□ 향후 조정계획

-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정의견 도출·제시(3월)

3. 평택항 및 부산신항 항만명칭 변경

□ 과제 개요

- 당진군과 평택시, 경남도와 부산시간 항만명칭과 관련한 분쟁 조정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평택항 : 해상경계에 관한 현안해결을 전제로 평택·당진항으로 변경
 - 부산신항 : 우선적으로 건설사업명에 대해 부산·진해신항만 건설사업으로 변경
- 관계부처/집단의 의견
 - 경남도는 "부산·진해신항만"으로 명칭변경을 주장하고, 부산시는 부산항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부산신항"을 주장

□ 추진 경과

- 평택항은 평택·당진항으로 항만명칭을 변경하여 '04.12.30 시행 (항만법 시행령 개정)
- 부산신항 명칭 관련 양 지자체간 협의회(실·국장급)를 개최 하였으나 합의 실패

□ 향후 조정계획

- 양 지자체간 자체 협의회 개최 및 항만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회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최종안을 결정('05년초)

4. 스크린쿼터 축소

□ 과제 개요

- 한미투자협정(BIT)과 관련,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문제와 연계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영화 상영일수 조정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46일(40%)이상을 한국영화를 상영토록 규정. 단, 문화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40일 단축 가능(영화진흥법 제13조, 제15조)

□ 검토 필요사항

- 영화계는 스크린쿼터의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농업 등 쏠산업에 걸쳐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
- 영화산업 경쟁력 확보와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 추진을 위해 스크린 쿼터 축소방안을 검토

□ 추진 경과

- '03년 대통령 방미 관련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 논의 시작
- * 부처간 합의 곤란 및 영화계 등의 반발로 추진 지연
- 문화부와 영화계가 협의체를 구성('04.8.31 이후 5차례 회의)
- 현재 문화부를 중심으로 스크린쿼터 일수 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영화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

□ 향후 조정계획

- '05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정 예정

참 고 자 료

I . 정부업무조정등에 관한 규정

(‘03.10.31 제정, ’04.9.20 1차개정)

II . 부총리·책임장관회의 운영

III . 주무부처간사회의 운영

IV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계획

I 정부업무조정등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456호('04.9.2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절차와 조정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정책조정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간 업무협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업무의 기획 및 수립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민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상호간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상호간 협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제3조(정책의 공개) 여론수렴을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간 업무협약이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공개한다. 이 경우 주관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책시안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간 조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약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이 발생하는 때에는 주관행정기관의 책임하에 당사자간 조정을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 조정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분야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조정관리주무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정책분야별 조정) ①조정관리주무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을 한다.

1. 경제정책분야 : 재정경제부장관
2.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과학기술혁신정책분야 : 과학기술부장관
4. 통일·외교·안보정책분야 : 통일부장관
5. 사회·문화정책분야 : 보건복지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관리주무기관 또는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국무조정실장의 조정) 국무조정실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한다.

제7조(국무총리의 조정)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관리주무기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게 하거나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조정신청의 방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과제의 등록) 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간 이전을 조정과제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시한) ①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과제를 등록하는 때에는 조정과제의 성격,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조정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정책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정과정의 기록·관리) ①주관행정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 조정의 착수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정과제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종결 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정과제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조정관리주무기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정종결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황의 확인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 ①조정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를 둔다.

②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는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과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리주무기관의 1급공무원, 행정자치부의 1급공무원, 국정홍보처 홍보기획국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이 된다.

④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의 정기회의는 격주 1회 개최하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조정활동실적의 제출 등) 국무조정실장은 조정관리주무기관의 조정과제 등록현황, 조정활동실적, 향후 조정계획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조정백서의 발간) 국무조정실장은 매년 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의 조정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정신청서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함.			
피신청기관			
신청기관			
신청일자			
제 목			
주관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관계중앙 행정기관			
이견내용	주관중앙행정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	
조정필요성			
기타사항			
신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조정과제 등록·관리서

과제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중요도	
현재단계		진행평가			
조정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주관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관계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이견내용	주관부처		관계부처		
	첨부				
조정필요성 /전략					
	첨부				
조정시한					
조정일지	일자	내용			첨부
향후계획					
비고 (장애요인 등)					
의견쓰기	대통령				
	국무총리				
조정결과 (조정완료시)					
	첨부				완료일자
평가 및 시사점					
	첨부				
등록후 변동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당사자간 조정 관리카드

과제명			
주관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관계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이건내용	주관부처		관계부처
조정필요성			
당사자간 협의내용	일자	내용	
향후계획			
기타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조정종결서

등록번호			
과제명			
조정기관		담당부서	
주관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관계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조정결과			
기타사항			
조정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Ⅱ 부총리·책임장관회의 운영

① 국정운영 역할분담 시스템

□ 시스템 도입 취지

- 국정운영에서 분권과 효율을 기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합리성, 효율성, 안정성 제고

□ 기본방향

- 대통령은 핵심 국가전략을 담당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중심으로 운영
- 5대 분야별로 부총리·책임장관이 팀장이 됨으로써 총리에게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역할분담 체계

① 대통령과 총리간의 역할분담

○ 대통령 : 핵심국정과제에 중점

- 대통령의 고유업무(국가원수로서의 업무, 통일·외교·안보 사항 등)
- 정부혁신, 균형발전, 동북아전략 등 장기 국가전략과제
-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 소관업무(감사원, 국정원, 부방위 등) 등

○ 총리 : 일상적 국정운영 집행과 관리 총괄

- 부처업무 중 주요 현안 또는 추진상 미진업무 조정. 특히 사회질서·국민안전·위기관리 분야는 총리가 직접 총괄
-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닌 부처간 이견조정 사항
- 정책적 사안에 대한 당과의 사전 협의·조율 총괄
- 대통령비서실에서 총리실에 위임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② 5대 분야별 부총리·책임장관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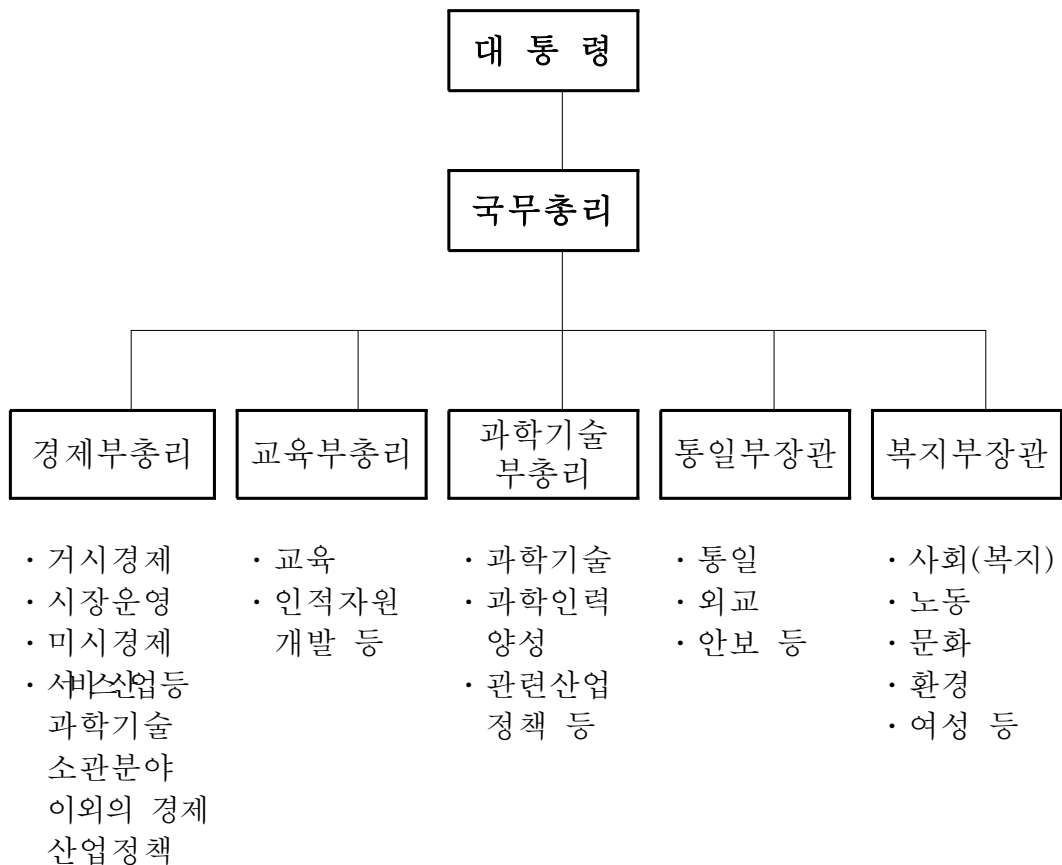
- 소관 분야별로 부총리 또는 책임장관이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업무를 활발히 협의·조정 역할분담

<참고 : 5대 분야별 장관회의>

- ▲ 경제분야 : 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
- ▲ 교육인적자원분야 : 교육부 (인적자원개발회의)
- ▲ 과학기술혁신분야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 통일외교안보분야 : 통일부(NSC상임위원장) (NSC상임위원회)
- ▲ 사회문화분야 : 보건복지부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 분야별 장관회의를 총괄하는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운영

【참고 : 역할분담 체계도】



□ 2 부총리 · 책임장관회의

□ 개최 배경

- 총리 주재로 5대 분야별 부총리와 책임장관들이 모여 내각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분야별 주요정책현안을 점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역할분담 시스템을 뒷받침

□ 개최 시기 : 매월 첫째주 목요일 10:00 개최 원칙

□ 구 성

- 국무총리(주재)
-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기부총리, 통일부장관,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 정책차장

□ 회의 운영

- 매월 첫째주 목요일 개최 원칙
- 안 건
 - 매월 분야별 주요 정책현안사항 처리방향
 - 각종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 독려
 - 기타 부처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안건 등

□ 개최 실적 : '04년 총 3회 개최

- 1차(8.30) :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대책 협의
- 2차(10.7) : 분야별 주요 현안 등 협의
- 3차(12.13) :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및 주요 현안 협의

Ⅲ 주무부처 간사회의 운영

① 신설 배경

- 정책조정 및 갈등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관리 필요
 - 정책조정 필요사항 정기점검체제를 구축, 사각지대 방지
 - 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상 어려움을 겪는 주요정책과제, 관계부처간 공동대처 할 필요가 있는 갈등과제 등의 추진 상황 점검 · 대처
 - 계기별 정부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
 - 분야별로 각종 정책의 추진상황을 확인 · 점검 · 독려하는 범정부적인 관리체계 마련
 - 국정운영기조, 국정 주요상황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공동대응
 - * 총체적 국정운영 상황 점검, 추석대책 종합, 국감대책 등
- ⇒ 부총리 · 책임장관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조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5대분야 주무부처 간사회의』 구성 · 운영
- '03년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 4대분야 주무부처 간사회의로 출발하였으나, '04년 5대분야 책임장관회의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5대분야 주무부처 간사회의로 변경 · 운영

② 구성 · 운영

□ 구 성

-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주재)
- 재정부 차관보, 교육부 차관보, 과기부 연구개발조정관, 통일부 기획관리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 기 능

- 5대 분야별 장관회의 운영 지원
- 부처간 협조·지원, 정책조정이 필요한 과제 추진 협의
- 부처별 주요정책과제 집행력 제고

□ 회의 운영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15:00 (원칙)
- 안 건
 - 분야별 정책조정 추진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회의개최시 마다 업데이트)
 - 각종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독려
 - 수시 대두되는 주요 현안사항 처리방향
 - 기타 주무부처가 협의를 요청하는 안건

<2004년 주무부처 간사회의 운영실적>

회 차	일 자	안 건
11차	1.7(수)	1. 2004년도 조정과제 현황 및 관리계획 2. 분야별 조정실적 및 계획 3. 1월중 내각운영 중점방향 4. 연두업무보고 관련
12차	1.29(목)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및 2월중 정책추진방향 3. 2월국회 법안처리 추진상황
13차	2.11(수)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 계획
14차	2.25(수)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 계획 3. 3월중 정책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15차	1.29(목)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 계획
16차	3.24(수)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 계획 3. 4월중 정책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17차	4.7(수)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 계획 3. 정부광고 효율성 제고방안
18차	4.28(수)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 계획 3. 5월중 정책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19차	5.12(수)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 계획
20차	5.27(목)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 계획 3. 6월중 정책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21차	6.16(목)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 계획
22차	7.1(목)	1. 상반기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상반기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및 향후 계획 3. 7월중 정책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23차	7.16(금)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 계획

회 차	일 자	안 건
24차	7.30(금)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및 향후 계획 3. 8월중 정책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25차	8.19(목)	1. 조정과제 관리(종합) 2. 분야별 조정실적 및 계획 3. 4대분야별 관계장관회의 개최 관련
26차	8.30(목)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조정실적 및 계획
27차	10.25(월)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 계획 3. 11월중 정책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28차	11.30(화)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정책조정실적 · 계획 3. 12월중 정책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29차	12.16(목)	1. 조정과제 관리 (종합) 2. 분야별 조정 · 갈등과제 연내 마무리 계획 3. 분야별 연내 조치필요 주요 과제

IV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추진 배경

- ☐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화·다원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 갈등이 분출하고 있으나,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갈등예방과 해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부담
 - 화물연대 파업, 새만금 사업, 방사성폐기장 건설 갈등 등
- ☐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를 행정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해 나갈 필요

추진 경과

- ☐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 주관으로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03.10~’04.1)
- ☐ 지속위, 연구내용을 대통령께 보고(’04.2.12 국정과제회의)
 - 대통령께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지시
- ☐ ‘지속위’에서 시스템 구축방안을 대통령께 보고(’04.9.30)
 - 법 제정, 시범사업, 지원센터 설립 등 총리실 주관으로 추진
- ☐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추진중

추진 전략

- 갈등관리를 행정의 중요한 핵심요소로 정착시키기 위한 인프라 시스템 구축
- 실제 갈등관련 사업에 시범적으로 갈등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사업별 바람직한 갈등해결모델 수립

주요 과제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국가적 갈등관리 인프라 구축
 - 법령의 제·개정, 공공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관리
 - 공공갈등의 예방·조정, 참여, 합의문화 형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갈등영향분석 등 갈등예방 제도 도입
 -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법령의 제·개정, 정책·사업계획의 수립시 갈등영향 분석 시행
 - 갈등영향분석서를 심의하고, 갈등관리정책을 자문하는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
 - 중대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Citizen's jury), 공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
-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 설치
 -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 합의에 의해 사안별로 설치하고 합의된 '기본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갈등조정회의 운영

☐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

- 정부의 갈등예방 및 해결프로세스별 지원 및 전문가 파견
- 공공갈등의 사례·자료의 통합관리, 법·제도·사례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 수행

☐ 갈등관리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 지원

- 갈등예방·조정부문 등의 각종 사업 중 기관별 실정에 적절한 주요사업을 선정, 시범운영 후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에 반영
 - 갈등관리기본법상 핵심요소를 공공정책 추진과정에 시범 적용하여 새로운 성공사례를 창출, 합리적인 갈등관리 모델 마련·확산 전파

* 핵심요소 :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위원회,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프로세스

핵심평가지표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완료

- 목표시한내('05.6월) 법제정완료 여부

☐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 갈등관리 모델 마련

- 목표시한내('05.12월) 갈등관리기법별 매뉴얼 제정 여부

☐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 법제정에 따른 목표시한 내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여부

주관·협력부처

☐ 국조실, 복지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문화재청

2004년도

조정백서

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실

총괄심의관실 (Tel) 3703-3859

발행일 : 2005.3.20